

인권정보자료실  
R1.1.1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 인권하루소식

제2007호 ~ 제2124호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시라 후 리나  
사기 진정되고 있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87년 6월이던 이후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8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며 지원 규모도 들쭉날쭉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따라 2000년 1만5천명, 2001년 1만3천명의 아동에 대해 지역 식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가정의 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 한 부모가정, 실직가정 등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심 식사 지원 아동은 약 16만 4천명으로 이는 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보건복지부의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다. 교육부 조혜영 사무관은 "답입교사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거나 급식비 장기 미납학생 등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해서 급식비 지원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교육부 역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정부의 결식아동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부스러기선교회는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차상위 계급을 포함한 빈곤인구를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보는데, 결식아동 역시 전체 아동인구(1천2백만명)의 10% 내외(1백2십만명)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동은 전체 아동의 0.1%수준에 그치고, 교육부의 지원도 2%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부스러기선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4월 결식아동 지정과정에서 △누나가 밥을 해 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경우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할머니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기피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조사기간이 1주일로 한정돼, 담당자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의 아동명단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

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임아무개 교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학교예산이 정해져 있거나 교장선생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부스러기 선교회가 빈민지역의 공부방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약아동인 1천2백38명중 정부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644명인 52%에 그쳤다. 40%가 넘는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결식지원사업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부스러기 선교회의 서인영 씨는 "결식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식사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양, 주거, 환경,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도 예방적인 복지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보영]

##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의문사진상규명위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정의 배수진을 친 것.

27일 계승연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4시 의문사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조사권한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사무국장은 "의문사는 당시 공안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시 대공분실, 기무사, 안기부 등의 관련자료가 2·3급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진상규명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의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창복 의원은 여기서 유가족 쪽의 수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 중 조사기간 연장 조항만을 받아들여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의문사법 개정을 둘러싼 법사위의 논의가 주목된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3월

### (제2042호 ~ 제2062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일(금)

제 20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의 71일에 걸친 동계 노숙투쟁이 정부기관과 회사 쪽의 철저한 외면 속에 지난달 28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레미콘노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사업주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한겨울을 난 것이다. <본지 1월 8일자 참조>

이날 오후 5시경 명동성당은 파업 중인 발전노조 간부들의 검거를 위해 전경들로 두세겹 둘러싸여 있었다. 명동 한빛은행 쪽에서 발전노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달려온 학생들도 전경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정보과 형사들은 이날 저녁 7시에 예정된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허가할 수 없다며 레미콘노조에 연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본 기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하권 2~3명이 앉으면 딱차는 정도의 공간에서 스티로폼과 비닐로 추위와 바람을 겨우 막아 만든 노숙농성장에서 장문기 위원장을 만났다. 장 위원장은 “탄압 사용자 구속, 미복귀자 복귀, 검찰의 무혐의 판결 등 우리의 억울한 내용을 다른 단체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며, 71일간의 동계노숙투쟁을 평가했다. 이어 “운반 단가(임금)도 많이 오르고 레미콘 사용자들도 바뀌어 가고 있다”며,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레미콘업계의 공식 입장 아래서도 조금씩 변화가고 있는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레미콘노조는 5개 지부 70여개 분회가 있는데, 지난해 파업으로 삼광분회와 광명분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약40개 분회가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를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당산철교 투쟁을 마친 후에도, 광주전남 지부 6개 분회 등 새로 조직된 곳은 대부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파업 중인 청해분회와 행운분회도 노사협상이 잘 진행된다고 한다. 파업이 없었던 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여전히 억울함을 삭이지 못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을 수가 있는

가? 용역강제를 동원해 전기봉으로 지지고 그냥 조지는데, 이게 죄가 없다고 한다. 개같은 경우다.” 지난해 말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레미콘노조 주최의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수배된 발전노조 간부들의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결국 명동성당 들머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경들을 사이에 두고 참석자 2백여 명은 명동성당 안과 밖으로 나뉘어져, 엠프와 스피커 등 집회장비를 설치하지 못한 채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했다. 힘없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홀대받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었다. [범용]

## 의문사범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신설하는 내용만으로 의문사진상규명 위위헌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조사권한의 강화없이 조사기간 연장은 빈껍데기”라며 의문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작업은 법적인 권한의 부재로 인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함부로 기각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적 조치로는 이 법의 제정취지인 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문사위는 88년 국회청문회 당시 보안사에서 녹화사업에 관해 제출한 자료목록을 근거로 현 기무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때 기무사는 ‘자료가 폐기되어 없다’고 하다가, 지난해 12월 여론에 못이겨 마지못해 2건의 자료를 넘긴 사례도 있다.

의문사위 이재범 조사관은 “문서를 폐기했으면 폐기대장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를 여는 것은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기관의 비협조 사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범용]

#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흐름과 쟁점

###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 (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첫날 가스 사유화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2.25), 철도노조는 철도 사유화에 대해서는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파업을 철회해 아쉬움을 남겼다. (2.27) 이에 홀로 남은 발전노조가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2. 범국민적 부시방한 반대운동, 경찰진압은 테러수준!

19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소파개정국민연대 등 6백여개 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 미대사관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2.14~21)됐고, 각계 인사 7백인이 참여하는 평화선언도 발표했다. (2.18) 민중연대 등의 시국농성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이 이어졌고(2.18),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2.20) 하지만 경찰은 범국민대회 도중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집회장에 난입·폭력을 행사했으며(2.20),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했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소장에 대해 인질극을 벌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21)

### 3. 국회, 테러방지법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총무는 2월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2.21) 한편,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 심의를 3월 11일~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2.26) 결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국회통과를 2월에도 저지한 셈이 됐다.

### 4. 군산개복동 화재 참사, 대한민국은 성매매 천국인가?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 '대가' 화재참사로 여종업원 14명이 사상했다. (1.29) 여성단체들은 현장 조사 후 여종업원들이 철문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1.30), 군산경찰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2.2) 또 현금보관장과 취업각서가 발견돼, 인신매매 후 성매매가 강요당했음도 드러났다. (2.2)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에서 유가족들과 여성단체들은 경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철저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2.8). 한편,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나도록 전북경찰은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5. 빈곤퇴기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기습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됐다. (2.15)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됐다. (2.26) 그러나 국회는 애초 개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조사권한 강화 없이 '조사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8)

## 논평

-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2.2)
- 악의 축? 부시 방한 거부하라!(2.9)
- 비전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정책(2.16)
-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2.23)

## 인권이야기

- 아...대한민국! (2.5/최정민)
- 테러방지법은 가고
-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2.19/이계수)
- 하리수와 오태양(2.26/정희진)

## 인권정보자료

-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인 정보집(2.6)
-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2.20)
- 2001 삼정교육대 백서(상)(1.23)
-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2.27)

## 울림

- 겨울에서 겨울로(2.2)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2.16)

## 기고

-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2.16/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 중요 판결·처분 및 소송

-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관련자 6명 전원 유죄판결(2.7)
- 서울지법 동부지원,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 구속영장 기각(2.8)
- 원주지원, 김·경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되는 고등학생 3명 살인혐의 기소에 무죄판결(2.15)
- "CCTV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돼(2.20)
-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폐공사 노조간부 무죄원심 파기

## 연재 - 필리핀 인권기행

- ①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2.22)
- ②전쟁터, 거리의 아이들 찾아 나선 민간단체 인권교육(2.23)
- ③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2.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달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안건에 대해서 방청이 제한돼 앞으로 알 권리와 관련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위원장은 논의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제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테러방지법 의견 제출 결과 등 보고안건과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의결안건, △비공개회의의 진행방안 검토 △면전진정 요구 등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한 위원이 "비공개회의의 진행방안 검토에 관한 안전자료를 보더라도 비공개 회의는 △회의의 질서유지 △국가의 안보 △사생활 보호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고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의 안건은 이중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진정 건은 비공개로 한다는 게 법에 있고, 비공개 회의의 진행방안 검토에 대한 논의는 내부 운영 논의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한 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 4일 인권위 의사팀의 관계자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논의안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공개회의의 진행방안에 대한 검토 안건은 방청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데, 방청인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문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뿐 아니라,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허심탄화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청불허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국가인권위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유로 논의안건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논의안건은 비공개로 하거나 아예 의사일정에서 빼는 걸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우려를 증폭시켰다.

국가인권위법 제14조는 회의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하나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비공개회의의 범위를 제49조와 같이 진정한 보호 차원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같은 지적에 결국 의사팀 관계자는 "회의 비공개 여부는 새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가 앞으로 민주성·투명성이라는 인권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지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주영)

## 철도청, 파업 후 대규모 고소고발

###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파업이 시작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 일단 회사에서는 노사합의를 해 '급한 불'부터 꺼 놓고, 이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해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통신 114 분사화 반대투쟁,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이어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되풀이됐다.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 및 고소고발 등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지난달 27일 철도청 손학래 청장과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철도파업을 종료하면서 체결한 노사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철도노조 김병국 산업안전국장은 "철도청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을 지위해제 했고 파업참가자를 (가담정도에 따라) A·B·C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위해제란 업무를 못하게 하는 중징계의 일종. 김 국장은 "합의에 위배되는 대규모 보복성 징계조치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나?"며, "대규모 집회와 2차 파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조합원 및 해고자 1백83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구액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청과 관계자는 "1만 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한 것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노사합의 내용이 회사 쪽에는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범용)

###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 강철구씨의 착각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성폭력 사건이 운동 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공개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져간 기억이 되었지만 천만의 말씀! 아직도 전쟁은 진행중이다. 아마도 그렇게 잊혀지게 된 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조건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언론 노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 박탈과 2차례의 탄핵투표와 재탄핵 그리고 탄핵재결로 이어지는 와중에 이미 해결된 사건이 아니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강철구씨가 표면적으로 조합원들의 응징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진실이다. 노조 내부의 분위기도 탄핵과정에서 이 용택씨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었지 성폭력 문제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2월 28일 강철구·이용택씨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탄핵 이후 4개월 이상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 노조사무실에 출근했으며 지난 여름부터 피해자는 KBS노조로부터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강철구·이용택씨가 사퇴를 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지법이 언론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임시총회를 통해 탄핵을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강철구·이용택씨는 사의를 표명했다.

사퇴를 하면서 그들은 2월 28일 'KBS 노동조합은 지켜주십시오'라는 한 편의 웃기는 짤방을 발표했다. 용서하고 포용하자며 자신들이 순교자가 되어 이 모든 '분쟁'과 '소모적인 정쟁'을 짊어지고 갈 터이니 남은 사람들은 KBS 노동조합을 위해 애써달라고 했다. '불분명한 노조의 명분을 앞세워 개인의 인간성과 가정까지 파멸시키는 과오는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면서 '정의와 진실은 세월이 가야 정립되는 것이지 다중의 힘으로 급조되지는 않기 때문'이란 다. 머리가 나쁜 건지 정치 9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노 분규 양상을 보였던 반대파 동지들', '새로운 노조 주도 세력이 된 소위 노정주 세력' 운운이다. 정말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봐요 분명히 말해주지만 당신은 이미 4개월 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물어서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서 노조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었던 거라고요. 덕분에 피해자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죠.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부디 나중에라도 반성하시길.

(최정민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공노조, 정부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촉구 파업(2.25) → 민주노총, 1일 연대파업(2.26) /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상임위상정 반대(2.26) /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3조2교대 근무제 2004년까지 시행 합의(2.27) / 5개발전회사, 52명 파업주동자 해임 등 징계 → 한전기술노조 등 7개 한전 자회사노조, "강경 진압 시 연대파업" 밝혀(3.3)

#### 2. 월드컵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논의 계속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 오는 3월 12일께 재논의하기로(2.26) / 한나라당,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 단체와 연계해'라는 부분 등을 추가한 수정안 제출(2.26)

#### 3. 연장도 안 주고 기간만 늘리면 뭐해?

유가족 등, 조사권한 강화 등 최소 요구 의문사법 개정 촉구(2.27) → 국회법사위, 조사권한 강화 없이 기간연장 등만으로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2.28)

#### 4. 상 줘도 모자랄 판에 교사 문책이러니!

인천시 북부교육청, 초등학교 성추행 범인 밝혀낸 교사 2명에 대해 3월 1일자 문책 인사 ... 전교조 교사 50여명 북부교육청 점거, 인사철회 요구(2.25) / 인권학원 재단, 전교조 교사 19명 파면·해임 결정(2.26)

#### 5.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친일반민족 행위자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발표...방응모 전조선일보사장·김성수 전동아일보 사장 등(2.28)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 40만명 명단자료 입수(3.1)

6. 기탁 : 아프리카 난민촌 유엔·국제구호단체 요원들, 식량 미끼로 어린이들 성착취 사실 드러났다고 영국(비비시)방송 밝혀(2.26)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17명, '재소자 의료권 확보 법조인선언' 발표(2.28) /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실시 밝혀... 하지만 육성회비·급식비 그대로(3.1)

#### ◎ 주요판결·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재선생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2.25) / 서울고법민사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 미국 형사법정,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의 80.5%, 남성 위주의 현행 호주 승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2.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6일(수)

제 20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경찰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에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요청한데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정통위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서울시경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현재 발전노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는 "파업자체가 불법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점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위는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일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표할 거"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위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은 발전노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경 수사조정반은 5일 오후 "서버 압수수색을 고려 중이며 아직 집행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시경 기획운영팀 담당자는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전화를 걸어 발전노조와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인지를 물었다. 이 담당자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같은 서버를 쓰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홈페이지가 동시에 폐쇄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갈월동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는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김기중 변호사,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이 참석한다. (이주영)

#### ✎ 책임기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펴낸곳 :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인간과복지

펴낸이 : 짐 아이프, 번역 : 김형식, 여지영 / 2001년 11월 / 355쪽

기존의 인권개념과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도전으로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의 접목을 제시한 책이 번역·출판됐다.

저자 아이프는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만들어진 국제인권규범이 남성·백인·지식인·중산층의 시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적이었고, 욕구 담론은 엘리트적이고 전문가의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인권담론으로 제3세대 인권론을 언급하며, △참여의 권리 △다들 권리 △환경권 △세대간의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수급자의 '욕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결론에서 저자는 인권의 보호와 실현이 투쟁 없이 얻을 수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사회복지 실천이 인권투쟁 속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인권옹호자'로서 자각하도록 문제를 던지고 있다.

〈목차〉 1. 세계화 시대의 인권 / 2. 인권의 삼세대 / 3.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인권 / 4. 문화와 인권 / 5. 인권과 인간의 욕구 / 6. 인권과 의무 / 7. 윤리와 인권 / 8. 인권담론의 참여 / 9.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권의 구축 / 10.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인권의 달성 / 1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존중 / 12. 결론: 인권실천의 전망 (최은아)

#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 발전소 매각 문제 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발전노조의 파업 9일째를 맞아 5일 오후 3시경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발전소 사유화에 따른 해외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노동·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산업의 사유화(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쪽 논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는 "정부가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때는 IMF 이후 98년 7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전까지 국내외 연구들은 발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유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제일 뒤에 고려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실제 정부는 98년 7월 IMF 프로그램의 합의사항으로 공기업 사유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이래,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해 사유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경영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최근 민영화 실험의 성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발전산업은 정부의 통제에서조차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9년 한전은 1조4천억원, 2000년에는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해, '공기업=비효율'이라 주장하며 사유화를 강행하는 정부논리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결국 김 교수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하지 않고서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영화보다 전문가의 책임경영과 공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산업 매각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만큼 시급한 과제냐?"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기간산업의 발전방안을 국민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서성석 중부발전본부 위원장은 "발전산업이 사유화됐을 때 민간업체가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투자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윤만 빼가려는 민간업체는 신규 발전소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규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일 신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

률'은 한전을 분할하게 돼 있지만 민영화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발전노조 민영화에 대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관련법이 통과됐다'는 정부논리가 잘못임을 지적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박태주 박사는 "의사결정 구조의 관료화 등은 민영화와 관계없이 개혁해야 할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에 대한) 규제장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은 "한국통신은 외국자본의 소유한도가 예초 33%에서 49%로 늘어났고 포철도 예초 30%에서 현재 60%로 확대됐다"며, '발전산업의 외국자본 소유를 30%로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불신했다. 실제 영국 배전산업의 경우도 사유화 6년만에 모두 미국계 회사에 매각된 바 있다. [범용]

###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지난 달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에바다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5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는 이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평택지청에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20분 경 에바다 농아원 근처에서 에바다 학교 교사 권오일 씨와 복지회 사무국장 남정수 씨는 최용식 씨, 양경수 씨 등 옛 재단 쪽 직원과 농아원생 15~16명에 의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이로 인해, 남 씨는 이가 3개 부러졌고 권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무릎뼈에 금이 가 각각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권 씨 등과 함께 농아원 출입문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붙이려 갔던 평택지원 집행관 2인 역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된 에바다 농아원은 지난 해 8월 이후 김철준 변호사 등 민주적 인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옛 재단 쪽 직원들은 남아있는 농아원생들을 동원해 에바다 정문을 봉쇄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농아원장, 교장 등의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아 왔다. 이 때문에 농아원과 학교는 장기간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학가는 학생들이 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복지회의 윤귀성 대표이사 등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달 9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8일 권 씨와 남 씨는 평택지원 집행관 2인이 농아원 출입문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공식하는 자리에 동행한 터였다.

5일 윤귀성 대표이사 등 7명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옛 재단측 인물들을 농아원생들과 분리시키지 않는 한 농아원을 거점으로 한 농아원생들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옛 재단 측이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평택경찰과 평택시청의 방조행위 때문"이라며, 6일 아침 10시 경찰청 인근에서 '폭력사태 방조하는 평택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다. 이어 11시에는 평택 지역 사회단체들이 평택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7일(목)

제 20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지난 5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248명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 요양신청을 접수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도 늘어,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노동조합은 7천여 명의 조합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2백62명을 대상으로 마산의 하나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했고 그 중 2백48명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됐다. 이는 검진대상자 중 94.6%에 해당한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뼈·근육·인대·신경에 생기는 질환으로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많이 쓸 때 발생하며, 어깨·허리·손·발 등을 잘못 움직이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운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인제 의대 신용철·강동목 교수, 한강성심병원 손미아 전문의들이 인체공학 및 노동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 교수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작업을 해야 하는 조선업종의 특성과 IMF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이의식 산업안전실장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몇 년간 수주량은 계속 늘었으나 신규직원은 채용하지 않아 1인당 작업량이 과중한 상태다.

또한 대우조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중대재해도 날로 늘어 노동자

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해 대우조선에서는 11명의 노동자가 추락·협착 등으로 사망했고, 일반 산업재해도 전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공업(주) 회사(대표이사 정성립) 측은 지난 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회사 측은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된 노동자들에게 요양신청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며 대량 직업병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근로감독관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모 씨는 "4일 부서장과 차장이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치료해 줄 거다. 산재요양신청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수암관 착출증으로 병원으로부터 수술까지 권고받은 유모 씨는 "부서의 안전담당자와 인력부팀장이 4일과 5일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요양신청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인권·사회단체들의 솔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이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여야가 11~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1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실상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참고인 몇 명을 불러 의견을 듣는 수준임이 확인된 점도 한몫을

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웬 잔소리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테러는 이미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전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기관이 국정원의 비상사태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국정원이 대테러대책기구의 [2면으로]

#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사회경험도 되고 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족한테 선물도 하려구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기대이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김○○양(19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보육교사 일을 했던 친구들의 만류에 지금은 피자집 서빙을 하고 있다. 직업체험을 하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김 양은 “보육교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좀 더 나이 든 다음 에라도 일하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신문 배달을 한 경험이 있는 이○○군(17세)은 가출을 한 후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했다. 신문배달을 하면 당연히 오토바이를 준다고 했지만 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할부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돈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기름값도 안 주고, 월급도 50만원 준다고 해놓고 24만원밖에 주지 않았어요”라며 힘들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 외에도 서울YMCA에서 2000년에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했던 청소년들 중 20%가 넘게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와 성희롱, 성차별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결국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대는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쫓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

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 중 신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의 박홍근 감독관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다”며 “(근로기준법 중) 청소년이 알아야 할 내용을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년에는 ‘연소자를 위한 근로기준 안내서’라는 책자를 만들어 중고등학교 상담실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안내서가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홍보하는 것 또한 학교의 몫으로만 남아 있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기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가 필요하다. [김영원]

###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6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경찰청 본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본지 6일자 참조)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성애자 인권연대,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 1면에서 계속】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지난달 26일 테러의 대상을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때로 한정하는 등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각계 선언운동을 조직해 오는 11일 정치권에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민가협은 매주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는 목요일집회를 7일에는 국회 앞으로 옮겨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범용]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바다 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씨는 “3개월 이상 외부세력이 농아원을 무단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이 새 이사진과 교사에 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농아원생들이 점점 더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을 방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준 변호사는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를 민주적이고 모법적인 장에 복지시설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농아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을 묵인하지 말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농아원생들을 악용하는 이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지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한편, 아침 11시 평택에서는 윤귀성 에바다 복지회 이사장, 김용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표,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 사무국장 등이 평택경찰서를 향의 방문했다. 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성호 평택경찰서장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알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법도 법이지만 사회 복지시설이라 쉽지 않다”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 사무국장은 “경찰이라면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 경찰의 이런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8일(금)  
제 20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95% 이상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위원장 박순자, 아래 청소용역노조)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파업을 돌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시철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60만원 정도의 임금만을 받으며,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등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한달에 4~5일 주휴를 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 청소반장인 남자관리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시달렸으며,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0일 청소용역노조를 결성하고, 기존 4개의 용역업체를 상대로 5개월에 걸친 교섭을 진행한 끝에 10만원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유급휴일과 생리휴가 등의 보장 △현행 1년 계약기간의 연장 △복지후생비의 현실적 책정 등 6개 사항을 도시철도공사에 당당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청소용역노조의 요구사항은 외면한 채, 지난 4일 오히려 서울지하철 5~8호선 청소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기존 4개에서 15개로 늘려 입찰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82명의 인원도 감축된다. 도시철도공사의 눈치를 보며 노조와의 대화

를 꺼리는 용역업체를 하나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청소용역노조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향상을 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찬배 위원장은 “(이번 분사방침은) 어렵게 만들어진 노조를 제대로 인정도 안하고 깨겠다는 것”이라며, 도시철도공사의 노조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면서, 인간대접 못 받고 용역업체와 관리장에 시달려 왔다”며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전했다. 청소용역노조의 이번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용

역 여성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구조조정은 파업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생존권과 노조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파업을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한 곳에만 27년의 수의계약을 준데 이어 올해에도 계약기간을 3년이나 연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용역노조의 요구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닌 셈.

이들은 8일 오전 11시 탑골공원 앞에서 ‘여성노동자 인권보장과 구조조정 철회를 위한 파업총집회’를 한다. 또한 9일 오후 1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제94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도시철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할 계획이다. [범용]

##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발전노조 파업 11일째,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홍근수 목사, 이석태 변호사,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교·법조·의료·언론·민중 각계 인사 9백88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값싸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것 △큰 폭의 요금인상, 전력대란 가능성, 전력주권침해 등 국민불안 요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국민적 합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는 한 나라의 중요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국민들과는 토론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전국민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 자리에는 파업중인 발전노조 노동자 20여 명이 발전노조의 깃발을 높이 들고 참석해, 발전산업 사유화 철회를 향한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범용]

###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만화사랑방’은 이동수 화백의 사정으로 쉽니다.

#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오는 8일로 94돌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대회가 10일 낮 1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문화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돼, 대학로 일대를 남녀 평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즈음해, 올해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 성매매방지법 제정

최근 2년 간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 화재사건은 여성들이 감금 상태에서 노예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대 성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 법률(아래 성매매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성단체연합과 한소리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없이 성매매 알선 관련 일체의 시설을 폐쇄 또는 영영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소리의 김미령 사무국장은 "성매매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루밤 사이에 여러 남성들을 받으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여성들을 생각해 보라"며, "여성들을 성육의 도구로 만드는 성매매는 사창이든 공창이든 그 자체로 인권유린"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성매매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엔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육의 공공성 확보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 시설에 인건비 등 약 5백28억원 추가 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과 보육교사회 등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은 저소득층과 취약보육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렸을 뿐,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는 것. 현재 전체 보육 시설 중 92.2%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은 비싼 보육료와 불균등한 보육의 질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한 달에 30만 원을 웃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대로 규제가 완화되고 아무런 지원 없이 가정보육모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꼴이다. 애초 여성단체들은 보육이 가족의 복지 및 여성의 일할 권리,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공공화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윤경 보육교사회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공보육시설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40% 이상"이라며, "우리나라도 공보육을 60% 이상 수준으로

늘리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은 상품이 아니라 복지의 권리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보육교사회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번 정부대책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운동도 펼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곧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 호주제 폐지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 의식과 관행의 대표적 상징은 호주제다. 아들-손자-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가 승계돼 서너살 짜리 아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호주제도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이혼·재혼·미혼모 가구의 자녀들이다. 이혼한 여성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또 재혼 가족의 경우 가족 내에서 성씨가 달라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안고 산다.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도 아닌 국가공문에 호주제를 기본으로 가족을 편제하는 호주제도는 결국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 선호 의식과 가부장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심각한 성비불균형은 호주제가 유발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라고 여성단체연합은 지적한다. 또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견고한 성벽이었던 호주제는 이같은 여성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9일(토)  
제 20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땡땡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故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故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검찰이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96년 삼청학살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1980년 10월 12일(5공치하 삼청학살 진행시기)부터 기일을 적용"하여 각각 판결을 내렸으며, "4만여 피해국민들을 차라리 총 쏘아 다 죽여주면 고통스런 삶을 마감할 터"라고 한탄했다.

故 박영두씨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하게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故 박영두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故김옥분 씨의 둘째 동생 김옥임 씨는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울음을 터트리며 말을 잇

지 못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1차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차 범국민서명운동은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명동성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 [범용]

##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가 닦을 올린 첫날, 그 사무실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어디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큰 것이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동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조직·인원 규모에 대한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정식 사무처 직원이 없이 출범할 때 어느 정도의 지연은 예상했었다. 그리고 "당분간 인권위 업무가 기대에 미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던 인권위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인권위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잇따른 채소자의 죽음에 가족과 인권단체들이 조사를 호소했을 때 인권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때, 무엇을 했는가? 정부 부처들이 푹푹 멍쳐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 때, 왜 한마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가인권위마저도 외면할 셈인가. 사무처에 정식직원이 없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미 다섯 달 전에 임명된 인권위원들은 뭘 하고 있는가.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인권위의 활동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무엇이며 무엇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회의가 언제 열리고 무슨 안건을 의결했는지도 짐작할 수 없다. 회의를 공개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은 또 하나의 관료조직의 출현을 우려케 한다. 인권위의 투명한 운영과 활동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들은 인권위에 잘 정리된 보고서나 보기에 좋은 '한 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가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하고 인권단체들의 조언과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인권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부터 힘을 얻으며 인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권위를 보고 싶다.



#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업무방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제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동수(32·상암동 철거민)씨. 99년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주거지를 잃은 이씨는 서울시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그런데 시청 측은 지난달 이씨가 시청 정문 앞에서 장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씨를 연행해 서울지방법원 즉결심판소(담당판사 이상철)로 넘겼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1조 12호)와 '불안감조성'(1조 24호)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월 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씨가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업무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고발이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또다시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때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동법률원)는 "의사표현행위로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성방가와 동일시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민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돼 2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만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라며, 서울

시청을 상대로 거듭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영)

##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2층에서 한총련 전 대의원인 박지수씨가 반인권·반통일악법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독 시위를 벌였다. 98년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 올림 철로 위의 사람들

2001.9/ 이지영 연출/ 노동자뉴스제작단 제작 / 50분/ 다큐멘터리

얼마전 있었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어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결집한 철도 노동자들은 먼저 노조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지난해 노동자뉴스제작단에서 내놓은 <철로위의 사람들>은 이들의 노조민주화 투쟁에 카메라를 밀착시켜 투쟁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한 체록집과도 같다.

물러난 철도노조는 노동 '귀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장노동자들과 유리된 채 권력의 단맛을 즐겼던 어용노조. 정부기관에 '떡값'을 돌리고, 하루에도 수백만원씩의 '관공비'를 흥청거렸던 이들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사력을 다해 직선제를 막아보려 온갖 뻔뻔스러운 짓을 일삼는다. 여기에 철도청은 기꺼이 지원군이 되어 공투본의 일꾼들을 부당 징계하는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보호한다. 어용노조는 자신들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천명을 해고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96년 <해고자>를 통해 이미 폭심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검증 받은 이지영씨는 <철로 위의 사람들>에서도 예의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려는 끈기있는 태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카메라는 대상과 멀찍이 떨어져 관망하기보다는 항상 밀착해서 모든 삶을 담아내려 한다. 보는 이들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투쟁의 현장에서 선목소리와 깊은 한숨, 열은 미소 하나 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작품은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 총파업의 험난한 강을 건넌 전사들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김정아]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저 또한 검찰의 수배조치와 경찰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며 털어놨다.

박씨는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있다"며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수배자, 양심수)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씨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고, 약 10여분 후 박씨는 전경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박씨는 서대문경찰서 보안2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내일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2일(화)  
제 20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테러방지법안은 종교의 평화사상과 양립불가능합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정진우 목사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 대한변협, 국가인권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2일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도 법안의 폐기에 발 벗고 나섰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소속 39개 인권단체 8백여 명이 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11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종교인선언대회가 열린 것이다.

종교인선언대회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는 테러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건적용을 우려하며, "예를 들어 각계 주요인사는 누구이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고 질문을 던졌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는 각계주요인사 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을 테러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군대동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대선 교무는 선언문을 통해 "지금은 민주화와

인권향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정원의 해체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라면서 "테러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발전과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테러행위를 반대"하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의 졸속한 국회통과가 아니라 국가간 또는 집단간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손짓"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종교인들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같은 시각 정보위원회는 국가대테러전문위원 이황우 동국대 교수 등 2명의 진술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제정 반대 의견을 들었고,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는 76개 인권·사회단체들 주축로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 간사는 "의견을 수렴하려면(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입법절차의 필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미진 간사는 "정보위원회는 법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12일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정보위원회는 일단 연기됐다. 정보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날 민주당 신임총무 선출 후 여야 총무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범용)

##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조계사 신도회는 11일 성명을 내, 10일 경찰의 대응전 난입을 부처님과 조계사를 유린한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신도회는 "법회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응전을 난입해 발전노조원을 연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회는 "신성한 부처님이 계신 법당을 5백여명의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13일까지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10일 당시 조계사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창립 2주년 기념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주영)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화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조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개인들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위장집회신고를 제출하여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집회·시위주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국가도 나서서 돕고 있다. 검찰이 발벗고 나섰고 법원이 맞장구를 친다. 에피소드 3에서처럼 법원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민사사건에서 민법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법관계에 대한 해석에서도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리고 집회 참여 자체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민사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집시법'과 '소유적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민법의 논리 하에서 그어지는 한계는 문제가 있다. 집시법은 개정해야하고 자유를 소유의 발아래 놓는 낡은 법리는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냉정하게 민사책임을 따져나가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쪽 당사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중립적 기구가 제출하는 증언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집회의 경과를 기록·촬영을 하고, 당해 집회를 중립적으로 평가·공개하는 기구를 우리의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계수 : 울산대 법학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주간인권호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동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3.7)/ 발전회사사장단, 노조지도부 250명의 추가 250명 고소고발 방침(3.9)/ 노조원 5천여명, 수도권 등지 기습집회(3.10)/ 노조원200명, 조계사에서 경찰의 불법연행·가택수색 항의농성→경찰력 난입, 노조원 연행(3.10)→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애?  
복지부·여성부·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법안폐기 촉구(3.11)→각계인사700인, 법안폐기 촉구(3.11)/ 정보위, 법안 관련 진술인 의견 비공개 청취(3.11)

4. 미국, 이젠 핵무기까지 ... 이스라엘도 평화 거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중동평화안 거부·군사작전 강화(3.3)→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한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 100여명, 이스라엘인 30여명 사망/ 미 국방부 보고서, 북·중·러 등 7개국 상대 핵무기 사용 계획 세워(3.9)

5. 기타 : 신정여중·한광고 학생들, 인권학원 재단 퇴진 요구 수업거부(3.4)/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신분증으로 대체 추진(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국보법 폐지 요구 국회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구조조정철회 요구 파업(3.8)/ 지문채취 강제 경범죄처벌법 1조 42항, 서울지법에 위헌심판제청신청(3.8)

◎ 중요 통계  
한국은행, 2000년 중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사회보장수혜금 비중 8.0%로, 영국(29.%), 일본(21.1%), 미국(9.8%) 수준에 크게 못미쳐(3.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3일(수)

제 20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주거침입·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작업을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하거나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일이 잇따랐다.

11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식으로 서울화려 조합원 8명을 협박해 일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진술서에 쓰도록 요구했고, 2명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문구를 쓰도록 재차 강요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쪽 간부에게 인계돼 복귀를 종용당했다.

이에 대해 수사2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동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11일 밤에는 울산화려 소속 조합원들이 투숙하고 있는 인천의 한 여관에 경찰이 검문을 한다고 들어와 조합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은 다른 경찰 10여명을 여관 복도에 세워 위압감을 조성하며 밤새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

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소속 경찰들은 회사 쪽이 올 때까지 3시간을 끌며 여관을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화려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경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화려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경 강화경찰서로 각각 체포·연행됐다. 김남훈 변호사에 따르면, 부평경찰서에서는 회사 쪽 사람을 불러놓고 조합원들에게 '복귀서약서를 써라. 아니면 계속 구속상태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사업장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무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 지역에서 발전노조 전승욱 남동 조직국장 찾았다며 영장 없이 20여 집을 수색했다. 이어 9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 각각 한 집을 수색했다.

한편,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의 인권침해를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이주영)

책읽기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출판사: 오름/ 엮은이: 김중섭/ 2001년 12월/ 317쪽

진주지역의 인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지역인권운동의 전망을 제시한 '현장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진주지역의 현장활동가들은 아동, 여성, 장애, 노동, 교육 등 분야별 인권 실태와 더불어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이슈로 간디학교와 진주한일병원 사례를 생생한 현장리포트로 전하고 있다. 엮은이 김중섭 씨는 '서울' 혹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인권운동을 비판하며, 지역 '인권실천'의 핵심과제로 '지역공동체' 삶터와 일터에서의 인권 감시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준논문〉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제1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살펴보기〉

'보호'라는 통제 속에 갇힌 학생들/ 재가보호아동의 생활과 인권/ 진주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장애인 차별과 인권/ (현장보고) 간디학교 사태와 교육권

〈제2부 삶의 현장에서 인권 살펴보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 스스로 지키고 찾는 시민권/ (현장보고) 진주한일병원 노동조합 설립, 그리고 1년 (최은아)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관구교사 이OO,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경 외 3~4명의 교도관을 박영두를 뒤로 시승시감한 후, 소위 비너꽃기(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짓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볼도록 묶은 다음 목과 팔꿈치 사이에 각목을 끼워, 각목을 틀어 짓히며 고통을 주는 방식의 가혹행위), 통닭구이(양 손목을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은 다음 묶인 부분을 포승줄로 연결한 후 포승줄을 잡아당겨 몸이 활처럼 휘게 하여 고통을 주는 방식의 가혹행위) 상태로, 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경 등 교도관 7~8명이 박영두를 교정봉, 포승, 피대, 고무호스, 워커발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였다.

○박영두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3~4차례 의식을 잃었으나, 그 때마다 교도관들이 물을 끼얹어가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다음날인 1984.10.13. 05:30경 박영두는 양손을 몸 앞쪽으로 수정(수갑)을 한 채 엎드린 상태로 변기에 얼굴을 처박고 있었고, 바지를 벗겨보니 생똥을 싼 상태였으며, 눈동자는 흰자만 보이고 윗니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상의를 들춰보니 등 전체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 (의문사위 보고서 '박영두의 사망경위' 부분 중)

지난해 6월 의문사위는 의문사 중 고 박영두 씨 사건을 최초로 진상규명했다. 17년간 침묵하고 있던 진실을 결국 세상에 밝힌 것. 그전까지는 사건의 진상조치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고소장 한번 쓸 수 없었던, 특히 5공 시절에는 관계기관에 진정조치 할 수 없었던, 고 박영두 씨의 큰 형 박영일 씨는 그제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박영일 씨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17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처벌을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법을 개정하고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침묵을 강요당한 시절'이 지나자, 국가는 공소시효를 방패막이로 국가범죄의 처벌책임을 또 다시 방기했다. 그 고통은 피해유족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다.

### 은폐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의문사위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박영두 씨가 사망한 날 오전 청송교도

소 김명식 소장의 주제로 관계직원 대책회의를 했다. 이후 대구지검 의성지청 최모 검사의 지휘로 부검을 실시했고, 최 검사는 '타살혐의 없음'으로 사체를 행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부검을 실시한 당시 청송 동산외과 병원 김모 원장도 '외표소견 및 내경 검사에는 사인이 될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교도소 쪽에 소견을 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된 고문·폭행과 살인 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과정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생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청송교도소에 도착한 박씨는 결코 동생의 시신을 볼 수 없었다. 교도소에서 이미 동생의 시신을 매장해 버린 것. 박씨가 동생의 사인을 묻자 교도소 쪽은 '실장마비로 죽었다'는 말만 했고, 부검을 했던 의사는 '지금로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때는 눈물도 안 나고, 막막하니까... 말할 그것도 없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박씨의 목소리가 잦아 들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 처리에 박씨는 애초부터 동생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5공 청문회 이후 관계기관에 진정서도 슬하게 냈습니다. 그러나 답신도 없고 지치고 그래서, '내 힘으론 안 되겠구나' 포기하려고 했지요. 잊어버리려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의문사위가 진실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 계속되는 가해, 지속되는 피해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가 소멸하거나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처벌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박씨는 "그 사람들이 고문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뉴우치고 미안해하는 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일도 없고...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더 큰소리 치며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유족들이 '침묵을 강요당한 시절' 그리고 고통이 온존하고 있는 현재에도, 가해교도관들은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 김명경 교도관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 배치 부장으로 지금까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른 이들도 대구지검 김천지일 등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계속되는 굴절된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 무조건 옹호되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범용]

###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4일(목)

제 20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고이즈미 방한에 반대했다.

집회에서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8만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8만이면 8만이고 20만이면 20만이지,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돼서야 (일본에) 어떻게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해 했다. 이어 "진상규명은 한국정부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제강점 아래 강제동원된 군인과 노무자들의 희생도 특별법의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집회에서도 이들의 피해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42년에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징집된 김행진씨는 태평양 전쟁의 최전방 뉴기니열도에 투입되어 수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는 밀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가며 생명을 유지하다가 46년 2월 경 미국 쪽으로부터 일제패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43년 강제동원되어 제철소에서 노무를 제공한 신천수씨의 증언도 있었다. 신씨는 18세 나이로 가족과 이별해 임금 한푼 못받고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라

면서 "참 서럽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또 일본 삿포로로 끌려갔던 황금주 씨는 "일본 정부는 입 다물어야 한다"면서도 "한국정부는 뛰히는 놈들이냐"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2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사죄를 요청하고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또 25~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1인시위를 전개하고, 다음달 4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피해자 1천대 오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김원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해 최대 3년의 진상조사기간을 가지며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호적 등재나 정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범용]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검열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에 반대하며 3년째 줄기차게 투쟁해 온 사회단체들이 13일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아래 검열반대공대위)를 발족했다.

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국가검열 철폐와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 모색이라는 목표 아래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정보통신윤리 활동을 감시하며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할 계획이다.

검열반대공대위의 자문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는 "인터넷은 민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이날 발족을 축하했다. 검열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일단 참여단체가 53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전 활동가 중심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발족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해 명동성당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등 이전까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운동은 24개 단체 소속 활동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의해 이루어져 왔었다. [범용]

###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감시 규제에 관한 절을 새로 만들어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전화·비디오카메라·생체인식기 등을 이용해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감시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목적과 사용기간 △설치방법·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등을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대용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중요한 노동인권의 문제로 떠오른 작업장 감시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규제하고자 하는 첫 시도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이 종사하는 사업장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고, 사무직의 경우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작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단협모범안에 감시 규제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장은 "회사의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건강에 해를 주기 때문에 IL0에서는 이를 중요한 산업안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통한 규제에서 나아가 법률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 역시 "노조가 없어 단협으로 노동자 감시를 규제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장 감시를 규제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폭력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회사는 구사대나 용역 직원을 동원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 폭력 등을 조장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레미콘노조, 울산 효성노조 등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구사대나 용역강편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확산현 위원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며 "민주노총이 단협안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상의 차별금지를 실질화하려는 모습이 획기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주영]

###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행해야 한다"(8조)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구인 구로지역 내에서 수년간 의료지원사업을 벌였던 우리내 약국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구로건강복지센터(대표 최해경, 이하 건강센터)는 지역 내 결손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센터는 검진 후 각 시설과 가까운 의원을 주치의로 연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부모, 시설종사자에게 건강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공부방과 어린이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센터의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지역내 사회복지 시설인 수궁모자원, 여성노동조합, 엠마오의 집 등 14개 시설로 확대됐다. 2001년 9월에 실시한 검진 결과 전체 1백95명 아동 중 간염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이 1백42명(72.5%), 치과 의뢰 1백12명, 내과와 소아과 의뢰 77명, 종합소견상 이상의 경우도 1백6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비용이 들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신과 상담과 장애아 치과치료도 함께 실시돼, 국가의 의료지원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상담은 '마음성장치료학교'로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치과치료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다 치료를 하는 곳도 몇 곳 안 돼 수개월씩 기다리는 형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연 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검진내용도 신체검사 수준에 불과하다.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상 최소한 신규입소 아동에 대한 검진은 필수적이지만 방치되고 있다.

건강검진에 참여했던 의사 김현숙씨는 "간염, 시력저하, 알레르기성질환, 비만이나 저체중 등은 보호자나 주위의 관심으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1차 검진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자체평가를 했었다. 복지센터의 김미영 사무국장은 "빈곤층을 비롯한 어린이 건강지원사업은 엄연히 국가의 업무로 보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들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도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보영]

###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 참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5일(금)

제 20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종고

###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상 단속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김흥연 의장은 대회사에서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또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노점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먹고살기 위한 자구책인 노점상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가혹하게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노점상 숫자는 2만.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노점상연합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해 정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 위주의 행정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권 박탈과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점상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은 "지난 달만 하더라도 대전 대덕구청의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연구환 씨가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연 씨는 공무원들이 노점상 가스통을 칼로 끊어 가스가 새자 이를 잡기 위해 다가서다 화를 입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단속권한을 넘기는 일이 많아 단속 과정의 폭력 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점상연합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 철거 용역반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서울 강북구청의 경우 1억5천만원, 부평구청은 2억7천만원, 일산 고양시는 1억2천만원 등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단속에 동원되는 용역강편을 해체하고 노점상 단속 비용을 노점상들의 자율질서사업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연대의 오종열 공동대표는 "도시 미관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에도 노점상이 많다"며, "노점상을 무조건 쓸어버릴 게 아니라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도시 속에 노점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도

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노점상 대책 전담 부서로서 새로 만들어진 서울시 시장개혁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라면서, "2만개의 노점 중 시민불편지역에 있는 4천여 개의 노점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노점상 입장에서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점상연합의 최 사무처장은 "일단 노점상 관련 전담 부서가 새로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청이 일방적으로 노점상대책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단체들과 노점상단체, 시청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사회복지, 지역환경 등 여러 시각에서 현 상황을 검토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노점상 단속을 중단하고 노점상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이동수

\*부시스턴 회사와 오노스턴 경찰...\*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적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6년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 부대로 분산 수용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거기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삼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89년 1월 20일 국방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기였다. 담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뿐이었다. 삼청교육 문제의 해결을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의 하나로까지 내걸었던 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금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13·14·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지연과 무성으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현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95년 재차 검찰에 고소장을 내봤으나 허사였고,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만한 해석이 나왔다. '전두환의 책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것이다. (95헌마365)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이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사건을 기각해 버렸다. 공소시효를 넘겨가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과 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죄'의 전형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수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계획과 지원 아래, 강제노역과 구타살인 등 인류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다.

헌데, 주목할만한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5공 정권이 삼청교육 수료생들에게 나눠준 '수료증'의 뒷면에는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에선 별 소식이 없다. 지난 2월 '사안이 복잡해 수사 중에 있다'는 공문 한 장이 날라왔을 뿐이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전영순 회장은 "5·18 피해자, 해직공직자 문제는 모두 해결됐는데, 왜 같은 피해자인 우리 문제만 해결이 안되냐"고 따져 묻는다. 이철호 교수는 "삼청교육이 5·18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함몰은 약자라는 사실"이라며, "공소시효 운운할 것이 아니라 5·18 문제와 같이 의의만 있으면 삼청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러한 전영순 회장은 "자료도 많이 가져다 봤는데 이번엔 기소하지 않을까요?"라며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6일(토)

제 20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 자격을 신설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에 의한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 이외의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또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돼 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재한화교 중 99%가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 선교사 등 소수의 인원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재한화교는 2만2천여명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등

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영주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한화교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안영도 변호사는 "영주란 개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체류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법무부 안에서는 토지문제,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교들은 법무부 안이나마 반가워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은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협조, 위원회 내부의 진통, 조사권한의 강화 없는 포퓰리즘적 법개정 등이 그것이다.

한계 속에서도나마 위원회는 최종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 접근, 녹화사업의 증거 발굴 등 성과를 남겨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원회가 지난 6월 최초로 진상규명한 고 박영두 씨 사건을 들 수 있다. 위원회는 84년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 씨가 감호소 내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진 것이라 밝혔다. 5공 당시 발생한 의문사가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타살로 인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원회가 왜 명백히 존재하는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느냐이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의 뜻을 밝힌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위원회는 진상규명 당시의 논의에서도 그랬고, 지난 주말 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25조는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비판과 요구에 직면해온 위원회가 취할 태도로서는 미지근하다 못해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원회가 아닌 가해자를 변호하는 기관에서 나올 말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의문사치고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사안은 없다. 이 때문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녹화사업, 고문치사의 증거들이 한 모서리만 비쳐도, 억압의 역사 속에서 불려나온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원회에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의 역사적 무게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라. 마땅히 할 일을 회피하거나 지레 결과를 짐작해 행동할 것이 아니다.

#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 <본지 3월 5일자 참조>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에 관한 운영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미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정건의 조사·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말고도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5. 위원회의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 관한 사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 이날 회의에 배석한 사무처 의사팀 관계자는 "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의 단계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4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의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찰력·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을 비롯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하지만 회의 중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박노현 위원이 "4호는 대부분의 논의 내용을 비공개하고 의견이 모아진 시점에서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며 "의사 공개보다 비공개가 원칙이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신동운 위원은 "4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5호에서 단순한 행정적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3달 반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 왜 나는 감옥에 있나? 그것도 독방에. 나의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온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해 9월 11일 테러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주로 이슬람국가나 중동 출신의 사람들 1천2백 여명이 9. 11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구금돼 있다. 앰네스티는 제조사 및 변호인과의 인터뷰, 교도소 두 곳에 대한 방문 자료를 토대로, 이들 제조사들이 구금 사유를 알 권리, 변호인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독방 수감, 수감과 족쇄의 지나친 사용 등 가혹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앰네스티는 9.11 테러와 관련해 현재 구금돼 있는 사람과 추방된 사람,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미 정부에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이에 5호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됐지만, 4호에 대해서는 유현 위원 등이 거듭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해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4호의 악용 가능성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김창국 위원장은 논의 안건에 앞서 위원들의 의결 없이 "논의안건 3개는 비공개니까 방청인들은 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김 위원장은 논의안건 3개는 비공개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한 터였다.

과 위원이 "안건들 중 사무처 직원 누구를 어떤 회의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에 관한 안건은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뒤늦게 김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결을 거쳤으나, 단지 거수로 가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공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안건이 공개될 경우 왜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 결국 2명 기권, 1명 찬성, 나머지 위원들의 반대로 이후 안건에 관한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은 15일 논평을 통해 "영주자격은 영주권과 결코 같은 차원의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영주권 제도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평등노조의 이윤주 이주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생겼다"고 반기면서, "5년 이상 노동하면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주권을 줘야 한다"며 제도의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안 변호사가 초안작성에 참여하고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취득과 그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신설되고, 영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19일(화)  
제 20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에바다 농아원의 정상화 노력을 위협하는 폭력사태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폭력 사태의 재발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새벽 0시 20분 경, 경기도 평택의 해아래집에 에바다농아원생 등 10명이 침입, 농아인 2명을 구타하고 집기를 파손했다. 당시 해아래집에는 여교사 3명과 에바다 농아학교 학생과 졸업생 15명이 자고 있었다. 신연실 교사에 따르면, 원생들은 문을 부수며 들어온 후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전화를 부수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경훈 씨와 이성준 씨를 집중 구타했다. 두 이씨는 15일 밤 방영된 피다수첩에서 옛 비리재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원생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산타페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번 일 때문에 이성준 씨는 입안 전체가 터졌고, 이경훈 씨는 이미 다친 다리를 집중적으로 맞아 송탄의 중앙성심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해아래집의 농아 아이들은 "무서워서 에바다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해, 18일엔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에바다 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와 박경석 이사(노들장애인학교 교장)는 18일 아침 11시경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동안 원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생들은 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동물 등을 끼었으며 대화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해아래집 폭력 사태는 지난 달 28일 권오일 교사 등을 폭행한 동일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의 미진한 대응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

난 달 28일 일단의 농아원생들은 법원 직원이 가져분결정을 불이러 가는데 동행했던 권 교사와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사무국장을 집단 폭행했다. 이와 관련, 평택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폭력 가해자들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뿐 "현장에선 뭘 했냐. 왜 수사가 미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김철준 변호사는 "가해자가 농아인임을 감안한다 해도 평택서의 수사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아래집 침탈은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이라며 "반복되는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란 말만하며 즉각 대처하지 않아, 결국 배후세력이 농아인들을 폭력에 몰들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96년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옛 재단 측은 이후 남아있는 농아원생들을 사주해 새로 구성된 민주적 이사진과 농아원장 등의 농아원 출입을 막고 폭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아래집의 신 교사는 "폭력에 동원된 농아원생들이 원래 나쁜 애들은 아니었다"며 "이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경찰이 적극 수사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 집회 피해 손해소송 기각

###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의 자유 제한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주방·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 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1톤 탑차를 운행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당시 집회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뜯겨져 나갔다.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집회 질서 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해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해 6~7월 '파업·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시민들의 민·형사상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13개 지검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은 주요 집회현장에서 집회종료 후 3일간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현재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7건에 이른다. (범용)

###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 아, 에바다

농아인 복지시설이자 학교인 '에바다'에 간 동료가 퐁물을 뒤집어썼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다. 핸드폰 연락도 안돼서 무수한 상상만 해본다. 그 동료는 한겨울 노상 단식농성에 얼굴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 거기에 퐁독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느라 동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걱정을 한다. 일단 내 식구 걱정을 하고 나니 휠체어에 탄 채 온 몸으로 퐁물을 뒤집어썼다는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이 걱정된다. 아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직결되어 에바다 문제에 대한 탄식이 나오니 사람의 간사함이 이리하다.

무릇 '제 일'처럼 여기라는 말만큼 뜻대로 안되는 일도 없다. 그러하기에 에바다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마땅히 부여받는 기관이 있는 것이다. 에바다 문제가 풀어지는 동안, 마땅히 '제 일'인 것에 손을 놓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에바다에 대한 관리감독적인 평택시와 경찰, 교육청은 방관, 묵인, 안이함으로 일관해 왔다. 그들 덕분에 에바다를 깨찬 시설비리자들만 시설 사유화, 시설 파탄, 폭력 사태 조장을 '제 일'로 삼고 있다.

에바다 복지회의 농아원생 60여명이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 96년 11월 27일이 있다. 당시 원생들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대통령 할아버지 꼭 우리의 눈물 흐르는 호소를 들어주셔서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장애인을 도와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세요"

이를 통해 에바다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왔다. 평택시에 비리재단과의 유착을 끊을 것을 경고했고, 경찰에 구 제단측이 지휘하는 폭력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고, 교육청에 교장실이 파손되는 등의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살필 것을 호소했다. 에바다와 같은 복지시설을 사유재산, 곧 '돈'으로 여기는 비리재단을 물러나게 하고, 민주적인 이사진을 뽑아 제대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기를 5년이 훌쩍 넘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꾸러지고 민주적인 이사진이 꾸러졌다. 그러나 합법적 이사인 그들은 에바다 문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 구 제단측이 동원한 인물들이 경찰이 구경하는 가운데 '정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열려라'는 뜻의 '에바다'는 왜 이리 굳게 닫힌 것일까? 비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밖'의 일, 주류 정치문제 '밖'의 일로 보기에 관계당국이 마땅하게 저야 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라면 제2, 제3의 에바다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 거기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퐁물 세례를 받은 동료와 같은 동네 사는 동료가 오늘부터 집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농담(?)을 한다. 씻어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냄새, 시설 비리는 정말 구리고 구리다. 열리지 않는 당국의 무관심에선 무슨 냄새가 날까?

(류은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꺾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 (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 (3.13) /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42명 전원 소환조사하기로 (3.14) /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문제 사회적 공론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 권고 (3.16) / 여야의원 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 발전노조는 수용·정부는 거부 (3.18)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시적 법 형태로 법제정 추진 계획 (3.13) /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치될 대테러센터에 주려던 사법경찰관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받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 수정안 대폭 수용하기로 (3.14)

3. '오 주여!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차별 공격 하루 33명 사망...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점령 (3.12) / 유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이·팔에 즉각 휴전 요구 결의안 채택 (3.12) / 이스라엘, 팔 공격 계속하기로 (3.13) / 이스라엘 평화운동가들, 라말라에서의 이스라엘 군 철수와 이스라엘군의 '살인행위' 막기 위한 국제사회 개입 요구 (3.14)

4.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회배상·진상규명 요구 (3.13)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촉구 (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 (3.14) / 인터넷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3.14) / 노점상연합, 정부의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 (3.14) / 국가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의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 범위 포괄적 (3.14) / 정부, '1인 시위' 제한 등 집시법 개정 추진하기로 (3.15) / 'HID복과공작원 전국연합동지회', 북과공작원 실제 인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 (3.15)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 (3.16) /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 (3.14) → 필리핀 거쳐 (3.15) → 서울 도착 (3.1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20일(수)

제 20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을 위해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아이엠에프 및 세계은행의 방향과 유엔안보리의 결의 내용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해 9·11 테러 이후 9월 28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373은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줄 동결과 차단이 핵심인데,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현행 국내법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이미 지난해 연말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밖에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

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한국방문은 전반적인 금융과 경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테러 관련 협의사항은 테러자금의 동결과 차단 시스템에 국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아이엠에프가 테러자금을 추적하는 금융시스템의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아이엠에프와 협의할 사항은 테러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자금 추적 금융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본지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어디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주로 국정원 쪽 얘기"라고 답했다. 결국 국정원이 유엔안보리, 아이엠에프 등을 핑계삼아 국

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대테러대책 활동을 규제하는 유엔인권위의 결의(2000/30, 2001/37)는 전혀 관심 밖에 놓여있다.

#### 국정원, 국제적 불이익 운운

한편, 이날 아침 최병모 변호사 등 인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평행선을 그은 채 면담은 끝났다.

이날 면담에 인권단체에서는 최병모 변호사, 진관순, 박창일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 회장, 조순덕 민가협 회장, 남상덕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경환 원내 총무, 김덕규 정보위원장, 천원택 국방위원장, 함승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국정원 관계자 1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발간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과 더불어 △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 △한국감옥의 현실 △비정규노동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하루소식 9년의 발자취 △우리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등의 기획기사들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거나 했습니까?"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든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시효제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공소시효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된 것도 아니고 △진실발견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사건을 진두지휘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장기적 도피에 따른 처벌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장 전 안기부장으로 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커녕 속죄의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고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

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법치국

가에서는 '법적 안정성'(신뢰보호)과 '실질적 정의' 모두가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당연히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범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더불어 "국가권력에 의한 (→ 3면으로 이어짐)

②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 아래, 특히 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수는 2백 40만에 이른다. 여기에는 군인·군속이 64만여명, 노무자가 1백52만여 명이다. 하지만 중군 위안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후로 50만~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게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두 사건은 또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신체의 자유의 박탈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등이 있다. 물론 로마협정에서도 이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동원이나 민간인학살 사건은 모두 진상조사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강제동원 피해는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꺾여버린다는 이유로, 민간인학살 문제는 정부나 미국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기에, 정부는 50년이 넘게 이들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지 않아 공소시효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출발이 될 수 있을지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범용]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구속

98년 대법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규정이라는 잣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동안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대학생만도 1천2백54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이들에게 법원과 검찰은 지난 5년간 이적규정이란 동일한 잣대로 족쇄를 채워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는 다음달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린 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또 다시 이적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인권적 측면으로 접근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족하는 「범사회대책위」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의 철폐를 위해 시도된 대책기구들과 달리, 한총련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한총련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의 정교한 대응에 대해 한총련은 정교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보법 폐지하고 정권 끌어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검찰의) 기술적인 박해에 단순히 대응했습니다." 「범사회대책위」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총련 전의장 김위원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강씨는 이전의 대책기구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족적인 기구로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의 사상이나 운동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적규정의 부당함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가입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범사회인, 이적규정 철폐요구

「범사회대책위」 발족을 앞두고 강씨는 "한총련의 활동방식을 떠나서 이들이 자유롭게 사색하고 정작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사회의 양식있는 지식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했고, 한총련 후배들에게는 "이적규정을 핑계삼아온 예소한 조직 형태를 고수하지 말라"고 한총련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은 지난 1월 31일 민가협 등 10여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모임을 꾸린 결과다. 그날 민가협양심수위원회 권오현 회장은 준비모임 대표로 추대되어 14일 설명회를 여는 등 대책기구 발족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벌였다.

한편, 한총련은 산하에 이적규정철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전대협 동우회는 통일운동과 함께 한총련합법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변도 한총련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7월경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

(→ 2면 '공소시효' 기사에서 이어짐)

범죄들은 통상적인 범죄와는 달리 그 불법이 밝혀진 때 오히려 충격과 격분 이 교차하면서 법적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제도는 이제 그 법적 한계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공소시효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배종대 교수(고려대 법대)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형벌을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배제, 소급금지 위배안돼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해석과 직결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할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박영두·수지김 사건 등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가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기존 주류법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관례가 이미 존재한다. 6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규정은 기존 법률로 처벌가능한 행위에 대해 과거 어느 시기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범죄를 새롭게 구성한 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론」 44호에 실린 박찬운 변호사의 주장도 껍데기 불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반인도적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죄형법정주의를 교조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이제 쐬기를 박아야 할 때가 왔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를 합법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노조 합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미 1년 전부터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해왔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아래 전공련)은 “지금껏 직무 유기를 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부는 IL0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행정양식은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의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정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의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전공련이 예정대로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예고하자, 19일 행정부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노조 건설기도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바로 지난 15일 IL0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2면에서 계속)

### 책임기

### 「한총련 이야기」

역은이 :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문의: 362-1987, www.h-gen.net/ 2002년 / 176쪽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년 간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1,254명 학생들 구속  
1998년, 1999년 ‘한총련 불발퇴’ 혐의로 구속된 학생수가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57%, 78% 차지  
1996년 연세대사건 당시 5,848명 학생들 연행 --- 「한총련이야기」 중에서

‘한총련 박해의 역사’를 기록한 현장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관 기내스북에 오를만한 수배기록, 구속인원수, 경찰폭력, 언론의 고의·악의적 오보 등... 이 보고서는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겪었던 고난사를 한눈에 정리해주고 있다.

또 보고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낱낱이 밝혔고, 한총련에 대한 쓴 소리를 통해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잡기를 제안하고 있다. 배우 권해효 씨, 학자 노암 쉘스키의 연대 메시지도 눈에 띈다.

이제, 묻고 싶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공안세력은 한총련이 어떻게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는지. 답은 그들의 몫이다.

<목차> 한총련 고난사 / 한국관 주홍글씨, 이적단체 규정 / 못 다한 이야기 / 한총련에 바란다 / 문화로 본 한총련 / 한총련을 위하여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002년 3월 21일(목)  
제 20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빚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아래 공교육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8일 △별도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적 실시 △자립형 사립고 점진적 확대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대책을 발표할 바 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연대는 공교육대책에 대해 “보충 자율학습(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연간 4번 이상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여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확대 방안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존중 풍토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의 대폭 확충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대학서열화 해소와 학벌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교육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에도 전교조는 공교육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기응변”이라고 혹평했고, 참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 명백한 교육개혁의 후퇴”임을 밝혔다. (범용)

(=>1면에서 이어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 20일 전공련은 “정부가 23~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 자체를 막으려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미 6만5천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동요 없이 일단 법외 노조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련은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3권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에 소속된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은 실질적 사회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제”라며 “만에 하나 현 정부가 공무원과 교수의 기본권을 억압할 경우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을 의미한다.

학교 도서관부터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좋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만들기보다는 학교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사무총장 이승희 씨는 “일부 학교에서는 좋은 책을 골라 구입하기보다는 출판사와 뒷거래를 통해 도서구입을 하기도 한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더라도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미국이 96%, 일본이 99.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4%이고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에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를 모두 합쳐 124개 학교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린이도서관연구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예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는 2천6백48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지만 실제 종류는 57종으로 1권의 책을 50~60씩 중복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중에는 학교에 책을 사자고 건의했다가 “이렇게 책이 많은데 무슨 책을 더 사냐”며 학교장한테 핀잔을 들은 적도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할 뿐 도서관구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도서,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 생산자들에게도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이 씨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경우 출판되는 종류가 대부분 학습지이거나 번역된 유아용그림책”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책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홍보부장 윤정주 씨는 “어린이 프로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만화영화가를 주를 이루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시청할 시간대에 어른 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는 아동의 발달과 정서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정해 줄 것을 방송국에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방송국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선정) 자신들의 고유권한으로 여겨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먼지투성이 창고 같은 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관으로 만들고 도서관 미디어 생산자가 어린이·청소년들의 발달을 돕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대책이 시급하다.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22일(금)

제 20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 사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등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달 25일 발전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 △고소·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급여 및 재산 가압류 신청 등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해 문제해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화력의 직원 사택에 사는 파업 참가 조합원 모두는 며칠 전 '사택퇴거 사유 알림'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서울화력 사택관리 운영위원회 장 이름의 이 공문은 이번 파업에 가담해 현재까지 미복귀한 직원은 △파업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로 명예를 훼손했고 △파업 미가담자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서울화력발전소 사택 단지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가구는 모두 31가구다. 이 사택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족들이 살고 있어, 회사측의 경고가 현실화되면 갈 곳 없이 쫓겨나는 꼴이 된다. 이에 초등학교생인 자녀가 둘이라는 조합원 가족 중 한 명은 "말도 안 된다. 파업에 참가하면 회사 직원이 아닌가. 사택에서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편지는 조합원들의 복귀를 강요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 퇴거 경고는 절차적인 문제 또한 안고 있다. 발전노조 이광희 총무 부장은 우선 "서울화력발전소에서 현재까지 해고된 조합원은 4명인데, 모든 파업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거 경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총무 부장은 "퇴거 등 사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쪽 3~5인, 노조 쪽 3~5인으로 구성된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사유의 합리성을 따지며 논의·결정하게 돼 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장이 이러한 공문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주식회사의 관계자는 "사택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퇴거 요청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서

울화력에 물으라며 이야기를 회피했다. 서울화력발전소 측은 "사택관리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퇴거하게 할 수 있다"며 퇴거요청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사택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지를 묻자 "퇴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복귀하지 않고 사택에서 소란하게 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21일 법원은 5개 발전회사가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각각 결정을 내려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지나침이 다시금 확인됐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의 일반 조합원 4천9백17명을 상대로 낸 1백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 및 사실 등을 볼 때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주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심본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원칙을 제시했던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는 'crimes against humanity'가 원어로 '인도에 반한 죄'라고도 번역된다. 이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정립된 것은 1946년 나찌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헌장에서였다. 이후 1993년 유고 전범재판과 94년 르완다전범재판, 그리고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ICC) 설치를 위한 로마회의 규정 등을 거치며 이제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압치, 기타 반인도적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당연히 일반 범죄와는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점에서 전쟁범죄와는 구분됨)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국가만을 주제로 하지 않음) 일어난다는 범죄일 것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인도성의 정도가 더 강해야 할 것 등이다. 유고전범재판 때까지만 해도 '부력충돌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됐으나, ICC 규정에 와서는 부력충돌과의 관련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의 경우,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이근안 고문사건 등은 반인도적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리 원칙을 만들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효부작용'의 원칙이다. 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작용조약', 74년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같은 명칭의 조약, 그리고 98년 ICC 근거규정 역시 시효부작용 원칙을 명

문화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는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도 시효 배제해야 한편, 최근 학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에 포괄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선 안 되는 국가범죄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치

김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경우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한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응분의 단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창조) - 도움말/자료 : 박찬운 변호사

###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지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간첩사건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성격도 남북어부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 다양해진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남파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자, 총련계 재일동포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권유지의 필요에 의해 간첩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씨도 일본에 총련활동을 하는 숙부가 있었다.

이장형씨처럼 80년대 초 가혹한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됐던 함주명씨, 강희철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거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다. 신규영씨의 경우는 그나마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졌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재심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에서 파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에는 피의자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으로 낙인찍혔고,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명예회복까지 가로막히고 있다. 현재 이씨는 "왜 날 석방시켰나? 난 감옥 안이 더 편했다"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아직까지 간첩으로 여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간첩혐의를 벗지 못하고서 하느 아래 감옥 아닌 곳이 없다는 절규일 것이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 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도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 사태 이후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연맹도 9·11 사태 이후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자국 내 난민, 외국인, 이주민 등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의 한 아시아출신 활동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안 통과 움직임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호·이주영)

###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선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이 검찰에 부여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정원에는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게 되며, 그러한 권한은 정보권력과 합쳐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될 것이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주해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둘째,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월드컵 안전대책 문제였다'던 정부의 장담은 듣기 좋은 선전문구였다? 기존의 월드컵 대책 법률과 대책반들은 무력한가? 정부는 그간 월드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써대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무능함이 대회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똑딱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인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가지기만 하면 해결되는가?

무엇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법을 두 달 동안만 시행하겠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한번 만든 법을 그렇게 쉽게 폐기할 리가 없다. 우리 입법사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일단 한시적이라고 얘기해놓고 법을 만든 후에는 '테러의 위험성이 상존하니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이 뻔하다. 특히 테러방지법처럼 국정원의 권력확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을 한시적으로 쓸 생각이었다면 애초 기획했을 리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한시법이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오직 테러방지법안을 폐기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2002년 3월 23일(토)

제 20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유엔인권위 소식 (1)

##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와 관련, 제네바에서 파스르마나 김철호 씨가 보내는 소식을 앞으로 주 1회 내지 2회 실는다.<편집자주>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됐다. 앞으로 6주간 열리는 올해 인권위에는 한국 등 53개 회원국과 지난해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미국을 비롯한 1백 40여 참가국 정부대표 그리고 정부간기구, 유엔전문기구, 민간단체들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 의장인 폴란드의 야코르보스키 대사는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해 올해 인권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생존권 박탈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테러 안보논리 강화와 그에 따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제한 등 심각성을 더해 가는 국제적 인권상황을 반영하듯, 개막식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로 붐볐으며, 정치적 긴장감이 회의장을 압도했다.

한편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연설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유엔의 인권분야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테러리즘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는 한편, 9·11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아랍주의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근 안보리가 결의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화해를 촉구하는 결의문 1397을 환영하나, 앞으로 이 지역에 관해 유엔인권위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권위에서도 예년과 같이 전세계의 인권상황을 국가별·주제별로 21개의 의제로 나눠 논의한다. 국가별로는 '전세계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침해'라는 의제 아래 아프가니스탄, 버마, 팔레스타인 등 10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 노

동자 단결권,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IMF와 세계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을 반영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논의된다. 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문제에 관한

동자 단결권,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IMF와 세계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을 반영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논의된다. 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문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제출되며, 인도네시아의 아체, 중국의 티베트 등에 관해서도 민간단체의 발언이 준비된다. 여성과 어린이에 관해서는 인신매매,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소년병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자와 관련에선 이주노동자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HIV/AIDS 환자의 인권도 논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유엔인권위 기간동안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회의들도 본 회의 못지 않게 많다. 민간단체들은 갖가지 워크숍과 회의를 열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4월 2일에는 평화인권연대, 민변 등 한국의 인권단체와 케이커, 파스르마나 등의 공동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제네바: 김철호)

### 인권의 사각지대 대응감방 폐쇄 시급

경기도 여주와 충남 서산의 대응감방이 폐쇄된다. 대응감방이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응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을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소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여주교도소와 서산 구치소는 대응감방의 이관 및 폐쇄를 목적으로 지난 7월과 10월에 신설된 바 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존재해 이관이 계속 지연돼왔다.

뒤늦게나마 대응감방 수용인들을 교정시설로 이관시키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응감방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몇 십년 동안 존속돼오면서 수용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현재 여주와 서산을 비롯해 전국에 운영중인 대응감방은 16곳. 하루평균 무려 3천 6백 여명이 수감된다. 수감 기간은 장기 평균 7개월이며 최장 11개월간 수감된 경우도 있다. 대응감방에서 대역실행에 불과한 유치실에 20여명이 수감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극심한 과밀수용에 수용자들은 번번이 칼잡에 시달리기 일쑤고, 유치실 위생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대응감방 한 곳당 2백여명이 넘는 수용인들이 수감돼 있지만 의무관이 배치된 곳은 전무한 데다 수용인에 대한 의료비 역시 턱없이 낮다. (대응감방 1인 1년 7천6백원/ 교정시설이 5만9천원) 여기에 교정시설처럼 별도의 도서실, 운동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최소한의 여가생활은 물론이고 몇 달씩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은 꿈도 못 꾸다. 전문적인 교정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고 대응감방 수용자를 관리, 처우할 경찰인력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서, 여성 수감자들이 남성 경찰관들의 감시 하에 놓이게 돼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대응감방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찰청은 최근 대응감방의 이관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 행정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대응감방의 폐쇄를 설명하고 조속한 이관을 추진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운 것.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응감방을 이관 받아야 할 법무부는 감 건너 불구경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남은 14개 대응감방의 이관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유혜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 “정부, 발전 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낮 1시 46개 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국민대책위)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서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근수 목사는 “전문 학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민영화를 유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처라고 하는데, 정부는 힘으로 노조를 제압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미복귀한 노조원 전원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도 25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 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 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정부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 간의 협상 결렬과 사태 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노조 와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조는 한 발 양보해 민영화를

2002년 3월 26일(화)  
제 20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언급하지 않고 징계 최소화 등 현안 문제 타결을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하고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회사가 갑자기 민영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는 이제껏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이윽고 24일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회사는 ‘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발전노조는 같은 날 2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간 극한 대립과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이주영)

##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2.25=발전노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돌입
- 3.5=사장단, 교섭 중단
- 3.5=강남경찰서, 정보통신윤리위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
- 3.7=각계 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
- 3.8=민교협·교수노조,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 3.10=노조원 200명 농성중인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
- 3.12=사측, 노조 간부 49명 해임 결정
-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 3.18=여야의원 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 3.18=노조-권고안 수용, 정부-수용 불가 입장 밝혀
-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해임 결정
- 3.19=전국 경제학·경영학 교수 102인,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 3.20=25일 9시까지 미복귀자 전원해임 통보
- 3.20=사회학자 43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정부에 촉구
- 3.23=노조, 민영화에 대해 언급 않기로 하고 협상 재개  
사측, 민영화 인정 노조에 요구
- 3.24=노동부 장관, 협상 결렬 일방 선언
- 3.25=연세대 발전노조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 3백80여명 연행
- 3.25=정부, 미복귀자 3천9백여 명 전원 해고 방침 재확인

## ◎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 가해자의 인권?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갔더니 어떤 남자 손님이 주인에게 '왜 이 집은 B양 비디오를 갖다놓지 않느냐'고 호통치고 있었다. 대다수 남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한, 합법과 불법, 도덕과 수치, 대상의 경계... 이런 개념이 없는 듯 하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에 국가가 개입, 처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당연한 일상 문화이거나, 가족주의적 전통, '남녀상열지사', 혹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남성들간의 범죄였다. 피해 여성을 소유한 가족,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서, 남성의 '재산권' 침해를 의미했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 폭력은 범죄로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당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라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돼도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유독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뭘까? 혹시 여성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보다 인권 의식 높은 몇몇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집, 차량 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가해자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망신을 당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부메랑이다. 당연하게 허용되어 왔기에 '재수 없어 걸린' 사람만 마보 취급을 받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부장제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해 온 두 가지 기제, 즉 성 보수주의와 성의 이중 율리 때문이다. 성 보수주의 측면에서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를 더욱 수치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다. 성범죄는 법적 범죄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 수치로 간주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강간이나 성추행, 원조 교제 행위가 안 걸리면 놀이요 재미가 되지만, 드러났을 경우는 곧바로 망신이 된다는 점이다. 정말 남성들의 평소 주장대로, 이 문제가 범죄가 아니라 남성의 당연한 권리라면 그토록 창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피해는 시민권,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의 훼손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수감 중 재소자로서의 인권에 한정된다.

(정희진 : 한국여성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

##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1. '밀리면 안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 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사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사측, 1백47명 해임(3.18)/ 사회단체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경영학자 1백2명, 발전 민영화 유보 촉구(3.19)/ 10개국 노조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 정부에 노동자 탄압 중지 촉구(3.19)/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3.19)/ 사장단, 25일까지 업무복귀 않으면 해고 통보(3.20)/ 사회학자 43명, 정부에 노조와 성실한 대화 촉구(3.20)/ 사측, 파업참가자에게 사택 퇴거 공문 발송 확인(3.21)/ 노조 농성 중인 연세대에 경찰투입·강제해산(3.25)/ 정부, 복귀 안한 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뒷걸음치는 교육부, 무너지는 공교육  
교육부, △보충수업 부활 △체벌 허용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3.18)→교육연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20)/ 교육부,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3.21)→자립형 사립고 10개교 추가(3.25)/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대국민 선전포고'(3.25)

3. 공무원노조 불길  
서울경찰청,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봉쇄 방침(3.22)/ 공무원노조 출범...경찰력 투입·노조원 연행(3.23)

4. 미국의 오만방자, 갈수록 가관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임은 미국이 임기연장 반대했기 때문"(3.19)/ 케빈 몰리 미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하면 테러분자 폭력 줄어줄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 용의자들과 알카에다·탈레반 포로 항소권 불인정(3.21)

5. 기막 : 글리백공대위, 만성기·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예바다 옛재단측, 농아원생 사주해 현 이사진에 톱몰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정원,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불가피 억지(3.19)/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발족(3.20)/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과도한 테러조치가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억압"(3.20)/ 한·일정부, 투자협정 공시서명...WTO반대국 민행동, 한일투자협정 반대 시위(3.22)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27일(수)

제 20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건강권 침해 주장

만성기 백혈병 환자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흥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 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에 따르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돼 발생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데, 최근 개발된 글리벡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초기 치료할 경우 병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적의 신약'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기존 치료제인 인터페론은 백혈병의 진행을 억제할 뿐이며 온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글리벡의 시판을 허가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만성기 환자를 포함한 전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아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만성기 환자 대부분을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인터페론에 대해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 만성기 환자들은 인터페론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으며, 글리벡 치료를 원한다면 한달 3백만원(하루4알기준×2만5천원×30일)에 달하는 약값을 보험급여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가속기 내지 급성기로 병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공대위는 말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장유식 변호사는 소장에서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만성기 환자들이 백혈병의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위를 박탈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만성기 환자에게 대한 위헌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만성기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결국 파산자로 전락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당할 뿐더러 생명권 및 건강권까지 침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 국가인권위 늑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석 달간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55)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아주대병원 측은 "상태가 23일 저녁부터 급격히 악화돼 24일 오후 4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박 씨의 시신은 27일 병의 진행과정 및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졌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측은 박 씨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26일 오전 구치소 관계자가 병원비와 장례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아래 위원회)에 대한 유족들의 원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한 조순원 씨(33)와 박 씨의 유족들로부터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았으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작수를 미뤘었다. 이에 유족들과 인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진정 50일 만인 지난 7일에야 비로소 조사작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권위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박 씨의 부인 임영화 씨는 "남편이 죽기 하루전인 23일에서야 처음으로 다음주에 한번 보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일이 나자마자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지난 석 달 간 인권위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 씨의 누나 해은 씨도 "25일 인권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동생 사건과 관련해 내가 첫 조사라고 했다. 현재 인권위는 동생의 구치소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핸드폰을 훔친 이유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 차례 건강이상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치료를 받치해 오다가, 결국 지난 1월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졌다. (유혜정)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94년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을 인정하고도 기소를 유예했으며, 5·18전후 내란사건에 대해서는 95년 7월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활화산처럼 폭발했고, 그해 말 김영삼 정권은 반란과 내란의 수괴였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을 구속하게 됐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반란과 내란의 핵심세력을 처벌하려 했으나, 곧바로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적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반란과 내란에 관여했던 장세동 씨 등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5·18 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것. 특별법 제2조는, 전두환·노태우가 재임했던 93년 2월 24일까지를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으로 보고, 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96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별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두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특별법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5명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4명의 의견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특별법은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비록 소급금지원칙과 관련해 합헌의견이 소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중대한 국가범죄의 하나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예외된 역사가 비로소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

한편, 35년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45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아래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처벌법 제29조는 반민족행위의 공소시효를 50년 9월말까지로 정했으며, 제30조는 해방 이전의 반민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법은 명백히 소급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당시 소급입법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방 직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제 파시즘에 협력한 친일파들은 전범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비록 '반민특위'는 1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산당했지만, 일제 파시즘에 협력함으로써 중대한 국가범죄에 동참한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선례로서 적극 평가될 만하다. (범용)

###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계하며, 육·해군본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최전방부대나 서해5개 도서지역으로 배치한다. 이때 보안사령부는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한다.」

최근 기무사로부터 넘겨받아 의문사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80년대 초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때 의문사한 이윤성 일병은 2대 독자로 방위병 입영대상으로 밝혀져, 당시 정권이 소집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입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집, 녹화사업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진상들은 아직까지 한 건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들 사건들의 진상이 이후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다. (범용)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일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의장단에 배석한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유엔인권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제와 발언자 수의 방대한으로 인해, 6주간 거의 매일 저녁 9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문제를 이유로 매일 오후 6시까지 회의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정 축소는 곧바로 파행적 회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고문반대협약 선택의 정서에 관한 워킹그룹' 회의가 오후로 앞당겨졌다.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일부만이 회의 직전에 보고서를 받은 상황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은 발언시간 축소 등 민간단체의 참여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회의부터 5분간으로 줄어든 발언시간(지난해까지 각 단체 당 7분간 6회)에 대해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와중에, 이번 조치로 인해 또 다시 시간과 회수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참여권 제한은 이번 회의 초반부터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 시작 전에 열렸던 사전모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민간단체가 회의장 주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회의가 시작되자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 국가의 대표들이 '민간단체의 기여는 인정하나 참여는 제한돼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지난 19일 아시아국가 그룹을 대신해 일본 대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민

간단체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등 서방국가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지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부터 줄곧 유엔인권회의들을 모니터해 온 '인권 도큐멘테이션 센터(HRDC)'는 주간소식지 '휴먼라이츠 퍼처'를 통해 "이들 정부의 주목적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을 원천봉쇄 하려는데 있다"고 비난했다.

###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도 상정돼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화해촉구 결의안(안보리 1397)에도 불구하고 자살폭탄 사건과 보복공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인권위가 인민자결권과 인종주의 이슬람국가에 관한 의제에 이르자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 간의 대결양상이 논의를 압도했다.

21일 팔레스타인 대표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은 국제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스라엘군은 폭력·살인·파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대표는 핸드폰으로 시시각각 예루살렘의 현지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도 자살폭탄테러로 7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합법국가"라고 응수했다.

이집트,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주권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발언했다. 비이슬람 국가들 중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대결양상은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어졌다. 이스라엘 대표는 "안티 세미티즘(반 쉘종족주의)은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팔레스타인 대표는 "팔레스타인도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같은 핏줄인 쉘종족이다. 시오니즘(유대교주의)에 기반한 이스라엘의 폭압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저항권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논쟁이 지리하게 반복되는 가운데, 과테말라 대표는 "식민지나 점령지가 아닌 주권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주민 등의 인민자결권 투쟁들은 잊혀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리독립'과 스페인의 까탈로냐, 프랑스의 케벡과 같은 '자치', 이 두 가지 방식의 자결권 실현에 대해 인권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민간단체들도 국가들이 회피해 온 러시아의 체첸, 중국의 티벳, 신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런던에 기반한 민간단체 '리베레이션'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서파푸아 등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민의 자결권 문제가 인권위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민간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제네바:김철호]

한편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정부가 사주한 가짜 민간단체(GONGO)들이 유엔의 민간단체 협의 자격을 악용해 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현실도 탄압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하부기관인 인권소위원회 회의기를 축소하고,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일부 평론가들은 올해 선출될 차기 인권고등판무관은 메리 로빈슨의 활약에 대한 각국의 반감으로 인해 무능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한약화에 대해 한 민간단체 활동가는 "유엔에 대해 더이상 '비판적 협력'도 어렵게 될 것 같다"고 실망을 토로했다. [제네바:김철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28일(목)

제 20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 유엔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가 26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 본지 2001년 12월 4일자 참조)

최씨는 지난달 20일 경 자살을 시도한 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건강을 되찾아 가던 중이었다. 최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삶과 그들에게 안전망조차 돼주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장애로 인한 치료비 20여 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매달 월 60여 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기 때문. 이에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주일 간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장애인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

는 공포가 최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씨에게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어 함께 살 수 없을 뿐더러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올해 초 최씨는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경 최씨는 동사무소로부터 계좌추적에 관한 통지서를 한 통 받았다. 이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수급권자를 재심하는 절차의 일환인데, 최씨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형편이었다. 최씨는 이때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낙심한 나머지, 과산화수소 한 통과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상황은 최씨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아이의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최씨는 자살 시도 후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서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수급권 운동을 해야 한다"며 삶의 의지를 다시 보였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최씨는 앞으로의 바램을 남긴 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한편, 최씨의 장례는 28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복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제가 열린다. [이주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체들은 8만에서 10만까지 추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해 10 여명 을 넘지 않던 탈북자가 증가한데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몫을 했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는 대개 '경제형 난민'으로 분류되곤 한다.

아래 국정감사 자료는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탈북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적 조치를 보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 (최은아)

###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범법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말이나 되나?" 객석 여기저기서 고향이 터져 나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재향군인회 소속 초로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결국 오태양 씨는 2-3분 정도의 진술기회를 포기한 채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하는 편견과 적대적 시각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병역거부가 인권 문제로 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운을 뗀 박상원 병무청 감사관은 "병역거부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는 의도는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동정을 사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객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70대의 재향군인회원은 "너희가 6·25를 겪어 봤느냐"는 말로 모든 토론을 일축하기도 했다.

#### 소수자들의 인권 앞에 놓인 견고한 장벽 절감

이날 토론회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오재창 변호사,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 정진우 목사, 효림 스님 등이 병역거부권 찬성측 패널로, 최필재 국방부 법무관,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박상원 병무청 감사담당관, 최삼경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등이 반대측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패널이 참석한 만큼 심도깊은 토론이 기대됐으나, 일부 인신공격성 발언과 흑색선전 등은 방청자들을 적잖이 실망시켰다.

박상원 감사관은 "오태양은 더 이상 군대 연기가 안 되니까 결국 기피를 선택한 비양심적 인물"이라고 공격했고, 최삼경 목사는 인권단체들을 향해서도 "범법자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비난했다. 박 감사관은 또 찬반 토론자의 수가 균형을 이룬 데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처럼 토론회를 구성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축측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에는 군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수십명의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병역거부권에 대한 반대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자리를 떠, 토론회 마무리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수십년 만에 겨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소수자들의 인권' 앞에는 아직도 높고 견고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을 실감하게 한 토론회였다. [이창조]

###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됐다. 이중 국내입양 아동이 1천6백86명(장애아 18명)이고,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은 미혼모출산에 따른 것이며 미혼모들은 대개 미성년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설아동과 빈곤가정의 아동 입양은 각각 5%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정용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대를 이으려는 비밀입양으로 영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은 입양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양부모들이 입양기관에 입양비를 지불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 국내의 입양기관은 '법에 의해 산모병원비, 입양 전 위탁양육비 등의 수수료 및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양부모들이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다. 정 사무관은 "관례적으로 국내입양은 2백만원, 상대적으로 위탁기간이 더 긴 해외입양은 7백에서 8백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입양을 시도했던 한 여성은 "입양기관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애절한 정도와 경제력, 학력 등을 고려해 3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구한다"며, 입양이 아동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입양비용을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아동양육비에서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홍보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까지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입양기관들은 양부모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수수료 정도는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배정이 안 된다'는 불만 소리를 할 뿐이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6개월 이내에 양부모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보고에 의하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는 모두 10건으로 입양가정의 불화나 입양한 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양부모가 다시 아이를 유기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아동복지전문가들은 "정부가 입양에 대한 홍보의무와 철저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하며, 위기가정과 아동에 대한 복지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해외입양은,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불가능한 때로 제한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29일(금)

제 20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전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법안을 통과 시키지는 않겠다"며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에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

하지만 앞서 이 총무는 "법안내용을 잘 몰랐고, 국정원과 민주당 쪽으로부터 '인권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위 소속의

원인 이 총무는 법안 내용조차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주 여당 총무와도 면담했던 최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의원들이 법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탄식했다.

###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명동성당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애인 최옥란씨의 장례식이 경찰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은 한강성심병원에서 아침 6시 15분께 출발해 명동성당으로 향하던 최씨의 영구차량들을 시청역 앞에서 6시 55분께부터 가로막고 3시간 동안 노상 감금했다.

더구나 경찰은 기자들에게 마치 장례참가자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 차원에서 시위를 벌여 도로가 막힌 것처럼 말해 장례참가자들의 분노를 더욱 돋웠다. <본지 3월 28일자 참조>

애초 최씨의 유족들을 비롯한 장례참가자들은 최씨가 지난 해 12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명동성당에서 아침 7시에 노제를 지내고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 벽제화장터로 갈 예정이었으나, 시청에서 바로 화장터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부 장례위원들은 아침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장례식 원천봉쇄와 불법 노상감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석 노동장애이냐학 교장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리라고 꿈에도 꾸지 못했다"며 "고인을 편히 보내주려는 유족과 지인들의 노력조차 경찰이 무참히 뭉개버렸다"고 분노했다. 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생전에 최씨는 '너무 외롭다'고 말하곤 했다"며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가난에다 자신의 아들조차 곁에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결국 최씨를 죽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주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4년 프랑스의 한 법정.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는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 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중지부  
뚜비에에는 1947년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64년에 제정된 법률('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73년 뚜비에를 다시 고소했다. 그리고 89년 뚜비에가 체포되면서, 세기의 재판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64년에 제정된 법률을 뚜비에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지리한 법리는쟁이 계속됐다. 마침내 프랑스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반인도적 범죄가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형벌법규가 아니며,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을 중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이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지→연장→배제의 순서로 법률을 제·개정했다. 독일 패망일(45. 5. 8)을 기산점으로 볼 때, 나치의 학살행위(모살)는 1965년 5월 8일에 시효(20년)가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65년 4월 13일 이른바 시효계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독일 법

원이 재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49년 12월 31일까지를 시효계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어 69년에는 형법개정을 통해 모살(謀殺)죄의 시효를 30년으로 연장했으며, 79년에는 아예 모살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철저한 노력이었다. 국제사회 역시 1968년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시효 없는 처벌'을 명문화했다. 시효부작용 협약 1조는 '범행의 시점을 묻지 않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가입국 숫자가 많지 않고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빠짐에 따라, 이 협약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이사회가 유엔협약보다 대상범죄의 폭이 좁긴 하지만 동일한 명칭의 시효부작용 협약을 74년 채택한 데서 드러나듯,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 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대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 법리적 장벽이 존재했지만, 각 국은 여러 입법과 판례를 통해 대원칙을 수용해 왔다. 우리도 시효부작용 협약의 가입과 현실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창조]

◎도움 : 박찬운 변호사/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성된 후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배후조종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중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중씨 등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은 고문에 의해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혁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씨는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심장병인 협심증을 일으켜 졸도하기도 했고, 검사에게 중앙정보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 즉시 중앙정보부로 또 불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인측 증인은 한 사람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관계당국은 재판기록의 공개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정권과 사법부가 담합해 만든 인혁당 사건은 오늘날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27년이 지난 현재, 피해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국가범죄의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3월 30일(토)

제 20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협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

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21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 씨 등 총련계 연구자들을 초청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의 명부사본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작년 겨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최옥란 씨가 지난 3월 2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쳤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제도는 증명하고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관문은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최저생계비 적용은 수급권자의 자살을 부를 정도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판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많고 엄격하나 반면에 장애인이나 노인,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 등의 특수성을 따진 최저생계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할 수급자를 우려한다면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면, 제도를 시행할 사람,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 받아왔다. 응급조치가 이런 식인데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우선주의는 희생자들을 확산할 것이고, 현실성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권리를 조롱할 뿐이다.

사실상 유언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더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는 고인의 메시지를 국가는 절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추진위 김은식 사무국장은 '외통부와 국정원에서 홍 선생이 조총련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곤란하고 월드컵 이전에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홍 씨의 입국이 무산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총련 관계자의 입국허가 문제는 외통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외통부 동북아1과 이희섭 서기관은 "이번 홍 씨 건은 입국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사무국장은 "이전에도 (홍 선생이) 같은 이유로 입국신청을 했을 때 외통부에서 입국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외통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홍 씨는 지난 2월 4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특별법 공청회에도 초청됐으나, 외통부가 홍 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2백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은 37만명 정도의 명부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선생의 입국무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범용]

장례 행렬 노상감금, 고소

장애인운동가 고 최옥란 씨의 장례위원회는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이 장례행렬을 3시간 동안 노상감금한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장례위원장인 민주노동당 공태윤 씨는 이대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경찰의 갑작스런 침탈에 항의하다 전경버스에 40여분간 강제구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범용]



#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흐름과 쟁점

### 1. '발전소 민영화'가 하늘의 명령인가?

각계 인사 988명(3.7), 민교협(3.8)가 발전소 매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사회원로(3.16), 경제·경영학 교수(3.19), 사회학자 43명(3.20), 여성·환경단체(3.26), 문화예술인(3.28)이 발전소 매각의 유보와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3.17) 여야의원 26명이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3.18) 하지만 정부는 여야의원의 '권고안' 수용 불가를 거듭 밝히고(3.18~19) 노조에게 민영화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다(3.23)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3.24) 또한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조계사(3.10)와 연세대(3.25)에 경찰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불법연행해 복귀서를 강요했고(3.11~) 끝내는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4천명 가량을 전원해고한다고 밝혔다.(3.25)

### 2.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경찰은 죽어서 가는 길조차 막아

지난해 12월 1주일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여성장애인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3.26) 아이의 양육권과 생계급여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아 자살을 시도한 지 한달여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영구차량들을 노상에서 감금하고, 명동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장례식을 무산시켜 최 씨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힘들게 했다.(3.28)

### 3. 정치권, 테러방지법 처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술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3.6)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고, 종교인들 역시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3.11)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비난을 샀다.(3.11) 그후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한시적 법 형태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3.13) 이어 대테러센터가 사법경찰관 없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3.14)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수정안 역시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법안의 폐기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 4. 에바다 폭력 사태, 정상화 위협

옛 재단 측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으로 인해 에바다 농아원이 정상화 문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적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에바다 복지회는 2월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3.5)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경찰청에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3.6) 하지만 또다시 농아들의 생활공동체 해이래집에 10명이 침입, 방송에서 에바다의 옛 비리재단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농아인 2명을 집중구타하고 달아났다.(3.16) 이에 에바다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와 박경석 이사가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동안 폭력에 가담했던 원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흉물 등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3.18) 김철준 이사와 김용한 이사도 계속 대화 노력을 이어갔다.(3.19) 한편, 반복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이 미진하게 대응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 논평

-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3.9)
-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3.16)
-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3.23)
-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처(3.30)

### 인권이야기

- 강철구씨의 착각(3.5/최정민)
-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범위(3.12/이계수)
- 에바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리'(3.19/류은숙)
- 가해자의 인권?(3.26/정희진)

### 인권정보자료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3.6)
-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3.13)
- 한총련 이야기(3.21)
- 탈북자(3.28)

### 올림

- 철로 위의 사람들(3.9)

### 기획

-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 ①고 박영두 치사사건!
- ②한국관 인증청소, 삼정교육 비극은 진행형
- ③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 제도인가
- ④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⑤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시효 배제했다
- ⑥'반인도적 범죄' 단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기획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 ①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 민간인학살
- ②조작간첩사건
- ③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④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중요 판결·처분 및 소송

- 서울고법민사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판결(2.26)
-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 무죄원심 파기(2.26)
-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4월

### (제2063호 ~ 제2082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2일(화)

제 20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 배상심의회,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지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84년 연행 후 57일간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

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구배상심의회는 이근안 씨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지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 △다른 여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배상심의회가) 불법구

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며, "이를 기초로 이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상판결을 보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일 것"이고 "재심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허위자백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이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재심이란 이전 판결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을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다. (범용)

**<알립니다>**  
매주 화요일자로 나가는 '인권이야기'는 이번주부터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육이은(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이우갑(고한성당 주임신부),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씨가 맡습니다.

##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

교도소에서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가 되어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김혜자(34)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본지 2001년 7월 4일자 참조) 김 씨가 요양 중이던 청주 꽃마을 측은 지난달 30일 "이번달 들어 김 씨의 병세가 심하게 악화돼 23일 저녁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24일 화장됐으며, 유해는 꽃마을 납골당에 안치됐다.

김 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김 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즉각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청주교도소 측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등으로 수술을 기피했다. 이후 김 씨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지만, 대전교도소 측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자궁암 말기로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충북 청주 꽃마을에 맡겨져 하루 50-6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한편 교정시설 내의 부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개선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혜정)

○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

누가 국가인권위를 흔드는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에서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권위를 쥐흔드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갈망해 왔고, 또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왔던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기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다.

사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인권위에 대한 기대의 반은 접었다.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구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기엔 태생적으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의 기대가 있었다. 제도적 허점과 장애는 '사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실질적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쉽게 저항하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성실히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제도적 난관에 부딪혀 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인권위가 삐걱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다. 몇몇 인사들의 독선과 그로 인한 인권위의 폐쇄적 운영이 계속해서 잡음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회의 비공개원칙과 인사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다.

인권위라고 해서 부패하기 쉬운 권력의 속성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부패의 가능성을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위는 철저히 국민들 앞에서 발가벗어야 한다. 그럼에도 예 기성 권력기관의 타성과 관행을 좇아가려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 최근 인권위의 게시판을 도배질하고 있는 인사잡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일체의 '정보'로부터 차단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갖고 해명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나는 '의혹'에 실망하기보다 '침묵'에 실망한다. 인권위의 침묵으로부터 읽히는 것은 권위의식과 오만함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인사기준, 채용자의 면면을 공개한다면, 더이상 잡음과 루머가 설자리는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모든 잡음과 실망이 인권위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인권위 무용론'과 '인권위 포기론'이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인권위에 '희망'을 건다. 인권위는 인권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그 거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인권전선이 몇 발 더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인권위원회를 흔드는 것은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 비판적인 인권단체들도 아니다. 인권위를 전유하려는 소수의 엘리트의식이야말로 인권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암초다. 나는 인권위가 굳건히 서기를 갈망한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민초들의 시선을 악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창조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1. 장애인 최옥란씨 죽음... '생산적 복지'의 비정함이며 지난 12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 사망... 양육권과 26만원 생계급여 중 선택 강요당하다 자살 시도 1개월만에 (3.26) / 경찰, 장례행렬 노상구금... 장례식 무산 (3.28) -> 이와 관련, 장례위원회 서울경찰청장 고소 (3.29)

2. 신조차 포기했나? 전쟁광 이스라엘 아랍국가들, △이스라엘 아랍영토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등 중동평화안 '베이루트 선언' 채택 (3.28) / 이, 팔 정부 청사 침공 (3.29) / 유엔안보리, 팔 도시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요구 결의 채택 (3.30) / 이스라엘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외곽 팔 마을 점령 (3.30~31) / 사론 이스라엘 총리, '전쟁' 선포 (3.31)

3. 민영화에 목숨 건 정부 발전노조, 조건없는 협상 정부에 촉구 (3.25) / 여야, 발전노조원 농성 강제 해산 관련 정부와 노조에 대화 촉구 (3.25) / 민주노총, 발전소 매각반대와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탄압 맞서 4·2 총파업 결의 (3.26) / 문화예술인, 발전소 매각과 민영화 유보 촉구 (3.28) / 발전회사사장단, 대화 제의 공식거부 (3.28) / 정치학자,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3.29) / 철도·가스노조, "총파업 동참" 밝혀 (3.31)

4. 고물전투기 사관이라고 사는 우리나라는 고물장수?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인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른다고 발표 -> 9개사회단체, F-15K 선정 철회 촉구 (3.27) -> 6개 사회단체, 'F-15K 압력' 관련 국방부 획득실장 서울지검에 고발 (3.28)

5. 기타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찬반 양론 팽팽 (3.25) / 유엔인권위, 일정 축소 선언... 민간단체 발언시간 줄어 (3.25) / 만성기백열병 환자, 글리벡 보험 적용대상 제외 현범소원 (3.26) / 한나라당 원내 총무,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하겠다" (3.27)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4·3을 '무장폭동'으로 묘사한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3.28) / 김수환 추기경, "양심적 병역거부 존중돼야" (3.29) / 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 명부 보유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연구자 홍상진 씨 입국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29) / 개정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수사기관 감청사실 본인에 통보 (3.30)

○ 중요 통계 지난해 감청건수, 2천8백84건으로 2000년보다 21.2% 증가 (3.25) / 건강보험 급여 중단 대상 22개 일반약의 약국공급가, 보험약값의 1.8배 (3.2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3일(수) 제 20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노정협의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2일 밤 10시 경 명동성당 앞길은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그 시간 명동성당에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발전노조 차원의 보고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명동성당을 여러 겹으로 둘러싼 전경들은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상당 봉쇄를 풀 것을 기다리며 성당 밖에선 집회가 이어졌다.

"한 달 이상 투쟁해왔는데, 노·정합의안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팽배하려 발전소의 한 조합원은 마이크를 잡고 합의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발전노조원이 합의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우선, 민영화 철회를 위해 싸웠는데,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웬말입니까. 또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적정한 수준에서 한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합의문 수용 여부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 합의문을 받아들인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이날 낮 민주노총과 정부는 핵심쟁점이었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제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3일 새벽 1시 드디어 명동성당 안팎을 나누는 두꺼운 전경의 벽이 사라지

고, 보고대회가 시작됐다. 명동성당에 들어가겠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한바탕 지나간 후였다. "민주노총과 정부의 잠정합의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민주노총 소속 단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말을 뱉었다. "하지만 파업에 들어갈 때 약속했듯이

클릭! 인권정보자료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http://www.sarangbang.or.kr/kr/anti-human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법규·판례·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1. 논문
  -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 (박찬운 2002.3)
  -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치·배제 (조국 2002.2)
  -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 (조시현 2002.2)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2002.3)
2. 관련 법률, 판례, 협약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 헌법재판소 판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정 결정문 (1996.2.16)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작용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70.11.11)
3. (인권하루소식 기획 기사)
  -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⑦ (최은아)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산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문제는 "그러한 공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렴하는가"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반인도적 범죄(혹은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방법은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 개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 골자는 형소법 내에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삽입하고, 시효정지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 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증거조작 및 은폐행위는 조각은페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박찬운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과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형식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두 가지 방향 모두에서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내란 및 외

환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 발의 정족수인 20명 의원의 동의를 이

미 받아냈으며,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국내법의 제·개정 뿐 아니라, 국제조약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협약 가입에 관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가'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은 국회 건의안을 통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작용 협약'의 가입을 공문화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면죄부로 둘 것인지, 우리 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창조]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법 개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법의 원리로써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부칙을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과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법 개정엔 있어 예상되는 난관은  
"소급적용 논란이다. 당 인권위원회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무관심하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생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반적인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4일(목)

제 20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씨는 3일 정오부터 1시간 가량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에바다 폭력사태 비호하는 평택경찰서장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벌인 지 40여분이 지난 시각, 경찰청 최경환 경정은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며 고성으로 류 씨를 위협했다. 최 경정은 류 씨가 "혼자 서 있는 게 왜 안 되냐"고 하자 "법으로 그렇다"고 대꾸했다.

이후 정색 상하의를 입고 사진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 류 씨를 향해 사진을 찍어댔다. 류 씨가 "왜 함부로 사진을 찍냐"고 경찰에게 항의하자 경찰 측은 "집회 중이니 사진을 채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류 씨가 "1인 시위가 집회에 해당하냐"며, "본인 허락 없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사진촬영은 계속됐다.

곧 이어 양주열 경사의 지시로 경찰 10여명이 방패를 들고 류 씨를 에워싸, 류 씨가 든 피켓은 경찰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게 됐다. 류 씨의 항의에도 경찰은 막무가내였고, 이에 류 씨는 피켓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벌서듯이 1인 시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1인 시위를 마치고 류 씨가 건넌 피켓을 건너 차에 오를 때까지 뒤쫓아 가기도 했다.

한편, 류 씨는 이날 경찰의 사진채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

사진채증 불법

-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특정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
- 사진채증은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영장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다. 1인 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들기 싫다, 보기 싫다'며 귀막고 눈가리는 식의 1인 시위 방해는 그 슬픈 자화상에 칼질을 해대는 행위이다. 이날 경찰청의 1인 시위 방해는 '일단 막고 보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주영]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국가별인권상황'에 관한 의제 일정이 다가오면서, 제네바 유엔회의장 주변은 전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민간단체들로 붐비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아프간의 어린이 인권', '티벳의 인권', '테러리즘과 아시아의 인권' 등 회의장 안에서 정치적 이유로 잘 다루지지 않는 주제들로 다양한 회의와 간담회를 주최해 인권위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엔 민변과 평화인권연대 등 국내단체와 케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팩스모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인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안보논리가 인권침해의 주원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나, 이날 간담회장에는 한국 외교부 직원과 인턴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외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한 직원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네바:김철효]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지난달 25일부터 유엔인권위의 모든 회의 일정이 축소된 가운데, 유엔인권위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기존 일정에서 일주일 가량 회의가 지연됐으며,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논의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쟁점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는 정부, 민간단체 등 참가자의 발언시간이 30% 축소되었다. 정부의 경우 각 의제당 총 21회의 발언권 외에도 하루 4회의 반

박권, 의사진행 발언, 외무장관초청 발언 등 여전히 발언 기회가 많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단지 3분 30초 6회의 발언만이 허용된다(예년엔 7분 6회).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3세계 소규모 민간단체들이다.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 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사회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등의 의제기간 동안만 참가하는 경우가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뭐하고 노는 게 가장 재미있냐는 질문에 로빈(방글라데시, 7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엄마가 일하는 공장에서 혼자 놀거나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전부였던 로빈이 올 3월부터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로빈은 공장건물 2층, 단지 건물배대 위에 시멘트 철만을 해 놓은 집에서 여전히 혼자 놀아야 한다. 부모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혼자서 밥을 차려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다.

보육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집은 공단 안에 있어 소음과 화공악취 냄새가 심하고, 좁은 방 한칸에 3-4명의 식구가 함께 지내야 한다. 화장실도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집 주변엔 차들이 좁은 길을 뽕뽕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아동권리협약 제 2조에는 '아동이나 부모의 인종, 언어...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기본적인 법적 신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상태인 경우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평등노동 이주노동자지부장 이윤주 씨는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돌보줄 사람이 없어 본국의 친척에게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최상"인데 "출입국관리소는 이는 뒷전이고 아이를 미끼로 부모들을 추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거주권을 인정"하고 "가족과 아이의 선택에 의해 국적이 정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의제는 일정 지점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 어렵게 참가한 제3세계단체들은 귀국을 연기하거나 활동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7일 인권위 의장과 민간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한 민간단체 대표는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발언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이번 인권위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주장하기도 하나, 대부분 '그러면 정부들만 좋아하게 될 것'이라며 수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여러 민간단체들이 '각국 외무장관 초청연설' 등 회의 의제와 직접 상관이 없는 시간낭비를 줄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야쿠보르스키 의장(폴란드)이 "어떻게든 시간 내에 회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관료주의적 발상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통상법 인권에 어떤 영향?

2일에는 유엔인권위 회의장 주변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민간단체 전략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는 세계루터란연맹, 국제교문반대기구(OMCT)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가트(GATT),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WTO 체제 하의 국제통상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지난 2000년부터 인권소위가 시작한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업을 평가하면서, WTO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논의 중 한 민간단체 대표는 "WTO는 유엔보다 훨씬 민간단체에 비협조적이다. 특히 민간단체 이름에 '인권'이란 말만 들어가도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WTO도 국제통상법이 국제인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인권단체들이 심포지움 등을 통해 견인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한편 WTO가 소재한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들 간의 연대 방안도 모색됐다. [제네바:김철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5일(금)

제 20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하라" 이 대사관 근처 집회, 입다문 우리 정부도 문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인권침해 행위에 분노하는 양심의 불씨가 지펴졌다. 4일 아침 11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국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에 대해 규탄했다.

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성공회대의 한 학생은 "이스라엘은 자살 테러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죽고 다치는 걸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며 이스라엘의 위선을 비판했다. 흥근수 목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의 땅에서 내몰고 폭력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사론 수상이야말로 테러리스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함께'의 이수현 씨는 "2000년 9월 이후 이스라엘 군에 의해 1천4백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고, 아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와 탱크의 폭격에 팔·다리를 잃었다"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고발했다. 이어 이 씨는 "심지어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겠다고, 15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팔레스타인 남성을 출두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법안 반대 뜻 직접 전달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국 위원장과 유시춘 상임위원은 이날 낮 3시 반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 기구를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먼담 후, 유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낮 1시 반엔 유시춘 위원과 유현 위원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를 만나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인권단체 뿐 아니라 인권위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유시춘 위원은 전했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숙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서구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공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발간된 '휴먼라이츠피쳐'지에 따르면,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밀론 코타리씨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2/59, Add.1, 2)가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세계의 주거권 현황에 대한 이 보고서는 원래 지난해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에 항의해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밀론 코타리씨는 팔레스타인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개인자격으로 이 지역 주거권을 조사해, 이번 인권위 회기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차별' 혹은 '보복' 목적의 주거지역 파괴, 주민 강제주방, 귀환권(추방 이후 집으로 다시 돌아올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인자격으로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가 공개되선 안된다고 의장단회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유엔 인권위 참가자들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원천봉쇄를 하려는 시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고등판무관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격앙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에서는 아사 아라파트 의장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추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의 논쟁이 극심한 상호비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보고를 제출했다.

이날 고등판무관은 격양된 목소리로, 최근 이스라엘의 라말라, 베들레헴 등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 침해, 불법구금, 수도·전기 단절, 언론 접근 불허 등의 상황을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특히 국제적십자 등 구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봉쇄당하거나, 심지어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발인 직전에 라말라에서 자원봉사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한 아일랜드 소녀와의 전화통화를 인용했다. "나를 포함한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라파트 의장이 간혀 있는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지금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를 마치며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이 사태

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유엔 인권위 회기 동안 상황보고를 위해 자신을 직접 팔레스타인으로 특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미 2년 전 러시아가 체첸 지역을 공격했을 때도, 인권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회기 중에 긴급하게 이 지역을 직접 방문, 인권상황을 보고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이어진 논쟁은 이번 회기 중 가장 치열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고등판무관의 용기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보고는 완전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논의 중 시리아 대표는 이번 회기 중 팔레스타인에 대한 긴급특별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구권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팔레스타인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등판무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이 불공정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라고 역설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의장단이 5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긴급특별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제네바·김철호]

올림

<노란 들판>

<IMF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 <에바다, 끝나지 않는 투쟁> 등 주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카메라의 렌즈를 고정시켜온 박종필 씨가 <노란 들판>이라는 새 다큐를 내놓았다. 작품은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이 벌여온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힘겨운 일상을 담았다. 이번에도 그는 소수자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휠체어로 보행을 대신해야 할 이들은 가까운 동네로 이동하는 것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때로는 20-30년을 집안의 불박이장처럼 묶여 지내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고 작품은 말한다. 이들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의 첫 번째 목록인 셈.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에 굶픈 정부를 향해 노들야학 식구들은 지난 여름 몸을 내던진 항거를 시작했다. 쇠사슬을 몸에 감고 버스 정거에 나선 장애인들. 감독의 카메라는 그들과 함께 밀고 밀리면서 투쟁의 대열을 지킨다. 낮은 자들의 고난을 기록하는 그의 카메라는 그래서 수난도 많다. 빼앗기고 내동댕이쳐지기도 부지기수인 것.

<노란 들판>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다루는 한편 야학 선생님들의 수고로움도 동시에 담고 있다. 노들야학의 절반의 무게가 장애인들이라면 또 다른 절반을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야학 선생님들. 하지만 장애인들의 힘겨운 삶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작품은 야학 내의 이러한 갈등에도 작품의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노들야학과 함께 90분 길이로 제작한 것을 감독판으로 새롭게 편집할 것이라고 한다. 작품은 현재 노들야학에서 비디오로 판매하고 있다. [김정아]

<기고>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 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파스 로마나, 케이커, 국제화해위원회, 반전 인터내셔널,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 그리고 한국의 민변이 공동주최했다.

파스 로마나 사무총장인 이성훈 씨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의 첫 번째 발표자는 국제화해위원회의 미셸 마노 씨였다. 미셸 씨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간략히 발표하였다. 95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스위스에서는 얼마 전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거부당한 마리노라는 청년이 현재 단식투쟁 중이라는 최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대치 상황에서 최근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가질 거부하는 예비군·공무원 3백60여 명이 연서투쟁을 했고, 군입대를 앞둔 청년 150여명의 병역거부선언이 이어졌다. 최근 여성으로는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례도 생겨났고,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병역거부 늘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여론, 국방부, 국회의 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천6백40명이라는 전 세계 유례 없이 많은 수감자들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반전인터내셔널의 바트 호어맨 씨였다. 바트 씨는 현재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세계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시기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병역거부와 관련한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93년 헌법에 병역거부권을 명시했으나 실정법의 미비로 계속 거부자들이 처벌받아온 러시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모스크바 같은 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 강제징집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병역거부자 박해에 경악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케이커의 레이첼 브렛 씨는 병역거부권이 유엔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병역거부권에 관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레이첼 씨는 78년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병역거부권이 거론된 이후 98년의 포괄적 결의안에 이어 2000년 결의안에 이르기까지 유엔에서의 역사를 소개했다. 2000년 결의안은 각 국가별 좋은 실천사례를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돼 있다.

그녀는 특히 올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유익 관심이 저조한 이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98년 결의안의 내용이 병역거부권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다루고 있고 2000년 결의안에서 좋은 실천사례들을 뽑아 각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을 추동하고 관심을 높여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수집된 각 국별 실천사례는 그 분량과 내용이 정말 실망스러웠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공화국, 핀란드, 독일, 과테말라, 말리, 싱가포르 그리고 수단만 정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토론에서는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많이 관대해졌다고는 하지만 분쟁 상황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 중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씨는 이를 군사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민간법정과 다르게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됐다.

안보, 병역거부권 불인정 핑계 안돼

토론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아시아법률자료센터의 배질 씨는 98년과 2000년 유엔의 결의안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제출한 반박글을 예로 들면서 안보의 위협이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병역거부권에 대해 가장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의 문제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고의 확일화나 군사주의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을 하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02년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영국, 한국 등의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에서 참가해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병역거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피고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가들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아주 유의미한 시간들이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 교도소에서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시기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출소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시 1년 동안 심각한 두통과 혼절, 무월경 상태가 반복됐지만 교도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두통약과 진통제만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설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00년 5월 구속된 이후 그해 12월 손톱과 발톱 밑에 이유 없이 파명이 들더니 이듬해인 2001년 1월부터는 심각한 두통을 겪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두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2월에는 감기주사를 맞고 기절하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월경이 멎기 시작한 것도 대략 이때쯤. 교도소 간호조무사와 의무과장은 설 씨의 이러한 상태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통약과 진통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설 씨는 올 1월 출소하기 전까지 심각한 두통은 물론, 5-6차례의 혼절을 더 경험해야 했다.

제주교도소 박재홍 의무과장은 "설 씨가 자주 두통을 호소해왔고 몇 차례 실신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무과장은 "설 씨의 경우 평소 두통약이 잘 들었고 실신을 때 역시 30분만에 상태가 호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이외에 특별히 다른 일

병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은 다른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낮고, CT 혹은 MRI 진단 없이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계속된 두통과 구토 △무월경증 △경련 △피부 반점 및 결절 등은 모두 뇌종양 초기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국립암센터는 이러

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꼭 뇌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가 1년 동안 별다른 차도 없이 유사한 증상을 계속 호소해왔다면 적극적으로 정밀진단 등의 진료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며 "일상을 전적으로 교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교도소가 적극적인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 씨는 지난 2월 20일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방사선 및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뇌종양의 경우 완치가 어려운 데다 후유증 발생률이 높아, 설 씨의 입장에서 계속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유혜정)

##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한다는 당초 규정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활동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비껴 가면서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무엇 때문에 민주당이 이토록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기존의 법·제도와 기구를 통해 테러방지·예방·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비밀정보기구(국정원)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의 기능재편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밝히야 한다"고 주문하며 "단지 비판을 면하기 위해 법안에 부분적인 손질을 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시스템의 모습과 국민의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통과 저지를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한 정보기구의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공안정국 흐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시스템 마련에 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고교시절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 중 하나는 기성세대와 내가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는 점이었다. 학교 선생님들과도 그랬고, 토론회에서 만난 많은 어른들이 그랬다. 그때는 왜 '청소년 인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은 보호의 대상, 규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청소년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기성세대가 정한 특정 틀 안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인권은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미성숙'을 든다. 그러나 청소년은 늦어도 약 15세 가량이 되면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획득하며, 그 이후의 차이는 권리 행사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다(최윤진, 1999). 즉 청소년 보호법의 논리는 '청소년은 권리 행사 경험이 부족하므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청소년의 권리 행사 경험을 가로막음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청소년이 미성숙하다 하더라도,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판단 능력의 유무에 따라 갖는 것이 결코 아니며, 보호를 받기 위해 일방적인 성인의 잣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권위적 간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설사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권은 그런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갖는 권리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보호의 권리가 더욱 확장되어야 하지, 보호의 객체로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산적해 있는 청소년 문제, 교육문제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청소년 정책, 교육 정책은 막상 그 주체인 청소년을 제외시킨 채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해 왔다. 청소년은 마치 언제 어디서든 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비 범죄자'식의 전제 아래 청소년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체,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청소년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언제나 주변인으로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육이은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 주간인권호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1. 극에 달한 이스라엘 만행... '눈에 띄는 게 없나?'  
이스라엘, 베들레헤과 칼길야 등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침공 확대(4.1)/ 이슬람회의기구 소속 57개국, "이스라엘이 즉각 철군하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확대" 경고(4.1)/ 이, 팔 경찰 사령부 공격(4.2)/ 메리로빈슨 인권 고등판무관, 조사 차원에서 팔에 자신을 특파해달라고 유엔인권위에 요청(4.2)/ 이, 팔 자치지역인 예넌과 나블루스 부근 침공·팔 무장세력 피신 이유로 베들레헤 예수탄생교회 포위(4.3)/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들, 이 대사관 근처에서 팔 무력침공 항의 시위 벌여(4.4)/ 이, 예수탄생교회 총격·구급차 진입 봉쇄(4.4)/ 미 대통령, 태도 바꿔 이 철군 촉구(4.4)/ 유엔 안보리, 이 철수 요구 결의안 다시 채택(4.4)/ 부시 미 대통령, 이 총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철수 재차 촉구(4.6)

2. 발전파업, 비운의 타결  
발전파업 노·정 협상 타결, ①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 ②조합원에 대한 징계 적정수준에서 해결 되도록 노력 등... 합의 내용에 대해 조합원 등 반발(4.2)/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폐기·민주노총 지도부 전원 사퇴 결정(4.3)/ 발전노조, 조합원들 6일부터 업무복귀·10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예정 밝혀(4.3)/ 발전회사,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 강요(4.7)

3. 경찰 인권침해의 끝은 어디인가?  
구로경찰서,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에 대해 무리한 알몸수색(4.2)/ 경찰청, 불법적으로 사진채증하고 방패로 봉쇄하는 등 1인 시위 방해(4.3)

4. 기탁 :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됐음이 알려져(4.1)/ 교도소에서 암진단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 되어서야 풀려났던 김해자 씨, 3월 23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4.1)/ 민변·평화인권연대·팍스로마나·케이커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제네바 유엔 건물에서 개최(4.2)/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총무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직접 전달(4.4)/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성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됐음이 뒤늦게 알려져... 불법구급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0일(수)

제 20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9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고 김옥분(수지김)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국가정보원(사건 당시 안기부)은 사죄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직원과 당시 책임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유족과 인권·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공개사죄와 당시 사건에 개입한 현 국정원 직원의 공개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국민을 핍박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국가기관이나"고 되물으며, "단순 살인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 유족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원은 당장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국정원 직원 공개와 파면 촉구

또한 고 김옥분씨의 둘째 동생 김옥임 씨는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 씨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장세동과 같은 권력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고 김옥분씨의 유족과 인권·사회단체 대표단은 △수지김 유족에 대한 국정원장의 공개사죄 △수지김 사건·은폐 조작에 개입한 직원의 공개와 파면 △국정원(옛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진상 공개 요구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정원 민원실에 전달하고 국정원의 답변을 촉구했다.

고 김옥분씨의 유족과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3월부터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소시효 배제 범국민서명운동은 4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4월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고근예]

##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회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중이고 공소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5공 정권이 막을 내린 88년 이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수차례 관련자들을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법정 공방조차 벌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차 고소장을 냈던 것이다. 5공 정권은 삼청교육을 마치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준 바 있는데, 그 수료증은 "본 수료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지시하고 있다.

전영순 씨등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감독의 현실 △비정규노동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교칙과 학생의 인권 등 기획 기사도 담겨 있습니다.

####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유엔대표단'은 지난 4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 대사 등 관련 직원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정의용 대사는 "이번 인권위에서 어떤 외교부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면 '투표 없이 통과'되는 데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병역거부 관련 특수성 강조할 듯

유엔인권위는 이미 98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라는 데 합의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한 바 있다. 이때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국가그룹'(LMG: like minded group)은 이후에 '인권위의 합의에 반대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도 여기에 서명했다. 2000년에는 '대체복무 등 관련된 모범사례에 관한 조사에 합의하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통과'됐고, '비슷한 의사를 가진 국가 그룹'은 비슷한 성명을 또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이때는 한국정부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는 "적극적인 반대는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표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이번 인권위에 대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질문에는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련해 한국정부의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민간단체 활동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 발언(본지 27일자 참조)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민간단체에 적대적인 국가가 많은 아시아 그룹 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전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사는 한국이 민간단체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국가라고 말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에 관련한 국제민간단체와의 면담요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단체 대표단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모르 씨를 한국에 초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엔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상시적 초청' 제도의 도입에 관해 질문하자, 대표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이 어떤 국가에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상 국가의 정부가 초청하는 형식을 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세계 35개국은 인권위원회에 상시적 초청장이라는 것을 제출해 언제든지 특별한 초청절차 없이도 특별보고관이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 대해 대표단의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단은 한국정부와 관련 국제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부산한 준비에 들어갔다.

#### 민간단체 탄압 현실화

이번 유엔인권위 초반부터 우려했던 민간단체 탄압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한 특별회의'에서 민간단체 발언이 시작될 무렵, 파키스탄 정부 대표가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시간관계상 민간단체 발언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곧바로 알제리와 시리아가 동의를 표했고, 곧이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아랍국가와 중국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사상 유례 없는 '비정부단체의 발언권 원천봉쇄'가 자행됐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 대표단에게 20분의 발언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파키스탄 등

은 '시간관계상'이라는 핑계를 댔으나, 결국 민간단체 발언권을 생략하기 위한 논의와 표결을 하기 위해 애초에 민간단체에게 배정됐던 20분을 허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팍스 로마나의 조셉 라지쿠 마씨는 "10여년간 인권위를 참가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는 민간 참여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 유엔현장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구나 이런 식의 민간단체 탄압이 앞으로 관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된다. 오늘 사건은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유엔 활동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등판무관 1주일 간 팔레스타인 조사

5일 특별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 상황 조사를 위해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2일 고등판무관이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에 지니 대통령특사가 파견됐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곧 파견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이지 인권위나 인권고등판무관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여 참가자들의 반축을 샀다.

표결에서는 캐나다와 과테말라만이 파견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참관국인 미국은 투표권이 없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아랍권과 대부분 유럽연합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밖에 영국·독일·러시아 등은 기권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팔레스타인에 1주일간의 조사활동을 위해 파견되고, 돌아오는 대로 인권위에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현재 이스라엘이 고등판무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더라도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조사단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안보'나 '국익'의 관점이 아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

[제네바 : 김철호]



<기고>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인권위에 통보 가능"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의 첫 일정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국담당관 홀란(hulan Tsdev) 씨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국 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왜 참석을 하게 됐는지 또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이 어찌지에 대해 설명했다. 홀란 씨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계속 자신에게 정보를 줄 것을 부탁했다.

#### 한국 기독교계 입장에 놀라움

오후에는 주로 아시아 단체들과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병역거부 운동을 주도해온 몇몇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 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국제화해위원회와 반전인터넷서널의 활동가들은 한국의 분위기 중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범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평화단체인 국제화해위원회의 활동가는 예전에 개신교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역사가 있다고 말하며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세계적 종교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세계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에서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4일 점심,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와의 약속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인권, 평화단체들, 개인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 첫 주자는 이미 한국의 인권운동단체들과 많은 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이다. 이어 참가단은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해 이미 병역거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권정책협의회(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를 만났다. 주로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함께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점심에는 유엔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했다. 주제네바 유엔대사를 비롯해 대표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주로 58차 인권위원회 전반적인 상황과 병역거부에 관한 얘기들이었다. 이번 의제 9번에 예정돼 있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서 대사는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특수성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대사는 얘기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 국방부 등 국내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듯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가단은 대표부에 아직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한국 정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과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인 아모르(Amor)씨를 한국에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특별보고관 한국 초청 요청

마지막으로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이곳에 와 있는 국제단체들 특히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을 한국대표부에서 초청해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입장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흔쾌히 수락을 했다. 이곳 제네바에는 대부분 나라의 대표부가 있는데 많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들을 초청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는다. 각 정부들이 민간단체를 사회를 구성해가는 하나의 파트너로 사고하고 있다는 얘기다.

5일, 이번 주 인권위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익숙치않은 언어에 1주

일을 견디고 나니 피곤이 밀려왔다. 이날 일정은 유엔인권위 내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과 국제평화사무국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국의 상황을 두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막상 간담회에서 실무그룹 담당자는 넓은 의미에서 자의적 구금을 정의할 때 한국의 상황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며 몇 사건을 실무그룹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는 대신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돼 있으므로 이를 넓은 의미의 자의적 구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자의적구금 관련 실무그룹 제소 제안

국제평화사무국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평화단체이며 유럽연합 자체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이전 60~70년대에 병역거부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다음 만난 단체는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통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무척 놀라워했다.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고 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점심시간 무렵 이번 인권고등판무관실 병역거부에 관한 보고서를 담당했던 담당관을 만났다. 보고서 자체가 기대 이하로 실망스럽게 제출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각국 정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줄 것과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좀더 폭 넓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담당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비자발적 참여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민간단체들의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1일(목)

제 20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산업연수생, 파업으로 '휴가' 쟁취 가족 사망때도 고국 안 보내줘 파업 촉발

산업연수생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작업장 이동의 권리' 등 연수생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여, 마침내 회사측으로부터 권리보장을 약속받았다.

종이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모하마드 야르(파키스탄인) 씨는 지난 달 21일 고국에 있는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측에 휴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평소 열악한 작업 및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이 누적돼 있던 동료 파키스탄인 노동자 14명은 야르 씨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제히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좁은 컨테이너 박스와 물이 안 나오는 열악한 식당 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노동자 모감멜 씨는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2개의 컨테이너 박스는 14명이 함께 들어가 있기엔 턱없이 비좁아, 주야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번갈아 잠을 잘 수 있을 뿐이었다. 또 노동자들은 컨테이너 한 쪽을 나무 판자로 막아 부엌으로 사용하면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한다. 뒤늦게 회사측이 "야르 씨를 고국에 보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노동자들은 또,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측에서 야르 씨를 비롯해 4명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완전히 돌려보내겠다고 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열악한 생활환경, 본국송환 방침 등 연수생들의 말

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노동자들은 이 달 6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게 됐고, 9일부터는 안산역 앞에서 '우리도 인간이다. 외국인 연수생 인권을 보장하라', '해고조치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파켓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자신들을 다른 직장으로 옮겨 줄 것도 요구했다.

결국 회사는 10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용 목사는 "회사측이 야르 씨를 비롯해 연수생 모두를 다른 공장으로 옮겨 주기로 했고, 야르 씨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고국에 다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연수생들은 이날 회사의 결정에 무척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근심도 안게 됐다고 한다. 다른 공장으로 옮길 경우,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21일부터 10일까지 21일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 등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 쉼 주야로 일만 하며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 왔던 수동적인 삶을 스스로 극복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박 목사는 전했다.

산업연수생 계약에 따르면, 연수생들은 1년동안 한 달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원할 경우 작업장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주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001/243쪽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육성을 채록하여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기록한 실태보고서가 나왔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과 연좌제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생존자들의 진술은 50여 년 세월을 훌쩍 넘어 당시의 상황을 낫은 목소리지만 생생하게 증언한다. 보고서는 범국민위원회가 2~3년 전부터 언론보도나 연구자들의 자료, 유족회 활동을 기초로 19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가해자 △피학살자 현황 △학살 유형 △사례 및 증인 △유족회 관련 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국군·경찰·미군·인민군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을 적, 혹은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여 전투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범국민위원회는 50만에서 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고양 금정굴 등 전국의 19개 지역이다.

\* 범국민위원회 홈페이지(www.genocide.or.kr)에서 관련된 자료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은아]

###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오랜 별거 끝에 올해 초 이혼을 한 장아무개 씨는 자신과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숨기지 않고 지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아이의 입학 후 사정은 달라졌다. "혹시라도 이혼 사실이 아이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줄까봐" 장 씨는 학교에서 조사하는 가정환경 조사서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과제물 가운데엔 '아빠얼굴 그리기, 가족신문 만들기' 등, 주로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 '우리 집은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려줬지만 역부족이다.

때문에 장 씨와 같은 '한부모'들은 "아빠·엄마·나라는 정형화된 가정형태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개편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연수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도 문제지만, '홀어머니 가정'의 경우엔 경제적 여건 또한 무시 못할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일할 기회나,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는 데다 소득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살림만 했던 어머니들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식당직원이나 청소원, 파출부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임금은 생계유지에도 빠듯한 정도다.

물론 이혼한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약 5만여 가구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월 1만8천원 정도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입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액수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이 정도의 제도적 장치조차 수급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이혼하는 여성들은 헤어지는 것이 최대목적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한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전에 이혼 후의 대책을 준비했던 장 씨도 "이혼 전 양육비 지원에 대한 공증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안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유경희 소장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규정이 현 민법이나 가족법에는 부재하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양육비 보조를 현실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보영)

###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진수 씨는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근예)

###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가 국민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kr)는 9일 성명을 통해,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개인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일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한 일일이 확인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판매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권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격: 1만원 (우송료 별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2일(금)  
제 20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목살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 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담당 여경은 정모 씨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며 항의했으나, '절차'라며 일축했다. 또한 노조원이 생리 중임을 호소했으나, 이 역시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모 씨는 "잘못도 없이 경찰서에 잡혀간 것도 기가 찬데, 알몸 수색까지 당해 처음엔 말하기 싫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고 "다른 사람들도 경찰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수모를 당하겠거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 대법원, 무리한 알몸검신 위법 판결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성남남부 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김 모 씨 등이 낸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은 흥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낮고, 경찰이 알몸검사 말고는 흥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행형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청 훈령 제258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은 "알몸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알몸신체검사의 근거가 되는 경찰청 훈령 제258조를 두 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

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선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알몸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전 11시, 윤재옥 구로경찰서장은 유치장 알몸수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경찰서를 방문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연대,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규칙대로 한 것이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더욱 피해자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한편, 여성노조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의 중징계 및 사과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달 17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만화 사랑방

여동수



# 이스라엘에 말한다 '학살 중단·군대철수'

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팔 지역 인도적 지원해야"

11일 오전 10시 40분 비폭력평화연대, 다함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28개 사회단체 소속 회원 40여 명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4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항의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비폭력평화연대 김영 대표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만으로도 이스라엘 공격 이후 열흘 동안 2백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실태를 보고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법구금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블런스나 유엔구호차량, 전 세계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발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를 위한 연대 메시지에서 국제민주연대 변연식 대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1천여 명에 이르는 현역, 예비역 장·사병들이 정부의 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 자치지에서 군복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일반 지지자들도 3천여 명이 훨씬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 살육을 계속 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극악무도한 폭력 앞에서 평화는 갈망하는 양심적인 이스라엘인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28개 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

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지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점령지 내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관 스텝 등 대표단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 측이 취재 차 몰려오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40여 분 동안 대표단을 기피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12시 경이 되어서야 대표단은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홍근수 목사 등 사회단체 대표

들은 3시 30분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우지 마르노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사회단체 대표단이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우지 마르노대사는 "이스라엘이 테러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반문하며 "점령지구 내 테러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탱크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지 마르노 대사 역시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대표단은 우지 마르노 대사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과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약품·식량·식수·전기·주거 등을 제공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은아)

##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11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불법파업행위를 종료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한 파업이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발전회사들은 복귀자가 이 같은 서약서 작성에 불응하면 불이익 조치를 당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동발전주식회사가 6일 모든 발전처 및 사업소장에게 내려보낸 지시 공문에서 '서약서 작성 불응 시 징계 위 심의 시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서약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조차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 '보직을 주지 않겠다', '징계

위 심의 시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등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서약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표명토록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것이거나, 앞으로 파업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래의 내면적 의사까지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권 변호사는 "서약서 작성 강요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단 시급해, 빠른 시일 내에 발전노조원 중 신청인을 모아 가처분결정 신청을 먼저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조합원들이 발전회사를 상대로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감옥의 현실 △비정규노동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교칙과 학생의 인권 등 기획 기사도 담겨 있습니다.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 <기고> 최정민의 제네바 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의회)

###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중형무진

8일 오전 8시 반부터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ISA)의 철폐와 사회안전법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사람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이 농성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참가단에서는 민변의 오재창 변호사가 연대의 의미로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농성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대표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만나보겠다"고 답변했다.

결의안은 현재 초안이 마련돼 각 국가별로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 있으며 인권위원회가 끝날 4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다음 만남 단체는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이번 58차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단체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대한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법무부 인권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모법적인 수행생활을 해도 가석방제도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참가단은 "이같은 가석방제도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단은 "민간법

정에서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맞춤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도 가석방 제도 운용에 있어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단 이 문제가 매우 어렵고 국민적 감정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비록 법무부 관할 제도이지만 법무부 혼자 기준을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가단은 "법무부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특별히 인권과라면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에는 세계고문방지기구 (OMCT)와의 만남이 있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원래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 의제로 활동해 오다 최근 그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병역거부 외에도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

한편, 이날은 구두발언이 예정돼 있어 주로 인권위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참가단은 구두발언문에 이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인용하며 이러한 국제적 결의에 비해 한국정부는 오히려 병역거부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참가단은 전날 있었던 회원국 발언에서 한국정부가 "어느 나라나 인권문제는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 "한국정부도 시급히 병역거부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발언은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감옥과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협조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잘 해결한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수집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 참가단 등 다수 발언 기회 박탈, 인권위 자의적 결정 탓

그러나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시작부터 강대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패권주의와 민간단체에 대한 고의적 배제로 인한 마찰이 일정에까지 차질을 주면서 급기야 9번 의제 (국가별인권침해) 이후 모든 회의는 시간의 제한을 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변 등 대다수의 민간단체들은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제한된 시간이 끝나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인권위원회는 구두발제문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유엔의 공식문서에 첨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항의했고 9번의제의 마지막 구두발언을 하던 파스르마의 김철호 씨는 "인권위원회의 자의적 규칙 때문에 발언 기회를 박탈당한 많은 민간단체들 및 피해자들과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파스르마나도 구두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실 3분 30초의 짧은 구두발언을 하나 못하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엔인권위가 이렇게 민간단체들의 발언을 규제한 것은 인권위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 인권위에서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참여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지금까지 인권위를 이끌어왔다는 것이 과장된 평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 수는 총 66개국으로 로마규정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올해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98년 로마에서 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이 채택된 지 4년만의 일이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국가나 피고인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나 당사국이 아니어도 해당 범죄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는 당사국이 해당 범죄들을 처벌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판소가 법정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소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회의가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판사·검사 등은 내년 1월 선출될 예정이다.

앞으로 재판소의 효과적 운영에 걸

림들이 되는 것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검사의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한 7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다.

### 〈논평〉 이스라엘은 피문은 손을 거둬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점령당하 이들의 신음과 어린이와 여성의 울음소리가 높아가고, 날마다 삶의 동지가 파괴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비극이 들려오고 있다. 점령과 억압은 저항의 모태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폭력의 희생자임을 강변하지만 피문은 손으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폭력의 악순환은 님이 먼저나 달같이 먼 저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연코 이스라엘의 점령에 있다.

유대인학살은 인류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역사적 교훈이었고, 그에 기초해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나 자결권 존중을 제1조로 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반유대주의의 희생양이었던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향해 민족청소와 학살을 자행해왔다. 또 유엔 총회 및 안보리 결의의 대부분을 사장시키며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표적인 예로 '점령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4차 제네바 협정의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안보리 결의 452호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건설과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1402호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피문은 손으로는 세계의 양심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먼저 손을 씻어라.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돌팔매질과 소녀의 자살폭탄공격을 지켜보는 세계의 양심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서야 폭력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수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의 양심은 이스라엘의 살육을 똑똑히 보고 듣고 있다.

2002년 4월 13일(토)  
제 20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지난해 11월 박종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의 원안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현재 상임위로 넘겨진 상태이며, 이미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났다고 한다.

개정안은 1회에 개최할 수 있는 집회기간을 7일로 한정했으며, 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을 때는 취소신고를 하 게끔 규정했다. 장기간의 위장집회 신고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50미터 이내 집회에 한 해 심각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중현 보좌관은 '대사관 주변 집회 규정이 반대에 부딪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대규모 행진·소음시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민련은 14일 전경련 김각중 회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경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김창성 회장은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다중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매년 집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며, '작년 도심집회 인원을 제한하려던 것에 이어 올해는 소음

을 규제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경찰과 경제단체들이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붙으면 (작년에 준비해 놓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청원도 하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1인시위 등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용)

##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12일로 잡혔던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의 원안의 박종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좌관은 "일단 4월 19일까지는 정보위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영)

###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제6회 인권영화제가 다음달 30일 개막된다. 아트선재 센터와 작년에 영화제를 열었던 아트큐브 두 곳에서 1주일 동안 계속된다. 지난해, 5년의 경과를 돌아보면서 규모를 줄여 영화제를 치를 때 우리는 변화를 모색하겠노라고 관객과 약속했다. 소박할지라도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허리띠를 동여 맨 긴장으로 영화제를 준비해 왔다.

영화제가 시도한 첫 번째 변화는 먼저 내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영화제 성수기가 되면 인력 부족으로 쪼쪼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스텝 자원활동가 조직을 꾸렸다. 공모를 통해 모인 자원활동가들은 총 14명. 이들은 학생부터 전문분야의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자원활동가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업무를 분담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영화제의 실무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의 상시적 활동은 영화제가 잃지 말아야 할 초심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인권영화제는 초기부터 돈과 인기에 기댄 행사가 되지 않으려고 재정과 실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무료 상영을 지키면서도 기업에서 주는 '부담스러운 돈'을 멀리해 온 것이 그렇고 아무리 일손이 바쁘더라도 '외주' 주는 일이 없었던 것 또한 그렇다. 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질'로 환원되는 '능력'이란 없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영화제란 후원회원부터 자원활동가 참여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국내작품을 공모한 것도 이번 영화제의 새로운 시도였다. 지난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모했으며 총 40편의 작품이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렸다.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비롯해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가 풍성해졌다. 영화제 내부 시사를 거쳐 최종 확정작이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작품의 최종 목록도 현재까지 19편에 이른다. 다음주 마지막 시사회를 거치면 상영작은 20편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전쟁의 반인륜성을 드러내는 여러 편의 작품이 선보일 것이다.

'인권영화제의 변화'란 무엇인가에 골몰하던 중 역설적이게도 변하지 말아야 할 원칙이 뚜렷해진다. 영화제를 준비하다 보면 유혹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많다. '심의 거부' '무료상영' '인권의식' '비상업' 등을 고수하는 것은 실무를 방해하는 바리케이트 같은 것. 적당히 타협하고 넓은 길을 편안히 가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영화제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비밀의 화원을 만날 때까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장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을 앞으로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지난 해 11월 26일 인권위 출범과 동시에, 김용익 교수가 이모 씨를 대리해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 접수한 지 5개월만의 일이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인정

하지만 인권위는 이 씨 쪽이 권 시장에게 요구한 △인사조치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제천시장직 사퇴와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선 원상회복을 권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천시장이 이 씨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사과광고 게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윤리적 판단과 감정 및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 표시를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

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차별 이전 단계로 피해자의 상태를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조치 없어

또 여 간사는 "인권위가 최소한의 구제조치인 사과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

판소의 결정은 사과광고의 강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인권위가 이 때문에 사과 명령이 아닌 권고조차 스스로 포기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인권위가 진정한의 요구와 별도로 자체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여 간사는 "차별에 따른 피해를 생각한다면, 인권위가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았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김용익 교수는 "아무 알맹이 없는 구제조치 권고가 인권위에 접수된 다른 진정사안들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법·제도의 한계와 인권위의 태도 문제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0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주영]

##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15일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방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할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반인권 악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규탄 연설을 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정원은 구태에 젖어 테러방지법을 통해 새 시대에도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혹은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한시법 이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든 법안의 근본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안은 완전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 앞 단식농성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첫날은 민주노총과 인권실천시민연대 활동가들이 농성했으며, 이튿날인 16일엔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민변 등에서 단식농성을 이어나간다. [이주영]

2002년 4월 16일(화)

제 20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정의(iustitia)라는 라틴어 단어의 어원은 '자기 자리를 벗어났던 어떤 것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정의'라는 기준에 의하면 그 물건을 본래의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의 첫 시작도 바로 이 '정의'라는 단어의 본 뜻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권이란 없던 새로운 어떤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품위와 권리, 그러나 이제껏 다른 권력이나 억압적인 힘에 의해, 혹은 무지로 인해 빼앗기거나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었다는 결정과 함께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한편으로 반갑지만 다른 한편, 힘 빠지게 만드는 결정이다.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이유는 그것이 '차별'이었다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등에 담긴 피진정인의 요구는 바로 본래 그가 있어야 할 곳, 마땅히 누릴 권리의 상실에 대해 그 회복을 요구한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 1호 진정사건'에 대하여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의 무책임한 마무리로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정의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었고 나아가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기 자신답지 못한 결정이기에 스스로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결정인 것이다.

이제껏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정의'를 갈망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아무쪼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같은 적당한 타협과 마무리가 아닌 용기 있는 판단과 결정을 통해 '정의'를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우갑 : 고한 성당 주임 신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1. 학살중단하고 군대 철수하라

미·EU·러·유엔은 중동평화 촉구 성명 채택, 이스라엘군 철군 촉구(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4.11)

### 2.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 로마규정의 비준서 유엔 제출(4.11) 로마규정 비준한 국가 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날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 돌입(4.15)

### 4. 발전회사는 암흑천지

발전노조,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발전회사 사장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4.12)

### 5. 내치지 마세요

형의 사망 때문에 회사측에 휴가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 계기로 촉발됐던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21일 간 파업 끝 승리(4.10)/ 중국동포 4백여명, 정부의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 반대하며 집단 단식농성 돌입(4.12)

### 6. 차별은 맞는데..., 말꼬리 흐린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탈락한 제천 보건소장 전 의무과장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발표(4.14)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권 시장 제천시장 사퇴 등 진정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 7. 과거를 물어야 한다

수지김 유족과 인권단체, 국정원 앞에서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집회...관련 국정원 직원 공개와 파면 촉구(4.9) 한상범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 선임 위원장으로 취임(4.9)

### 8. 기탁

5기 이후 '이적단체' 사슬에 묶인 한총련, 대의원 대회 열고 10기 집행부선출(4.12)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7일(수)

제 20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의 내용을 '주5일 근무를 방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제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에 따르면, 주5일 근무는 9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휴일휴가 수를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월 내지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휴가와 주휴는 무급화하고, 초과근로 할증률 역시 축소된다.

민주노총 이수호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5일 근무의 단계별 도입방침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논의 내용대로라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은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도입이 불가능하고,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 590만 명도 2010년이 되어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앞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학교의 경우 2005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주5일 근무제가 단계별로 도입되면 300인 미만사업장 노동자의 자녀는 토요일을 혼자 보내야 할 뿐더러 부모의 직장에 따른 차별이 자녀들에게 곧바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의 양에 따라 노동시간을 변동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이 현행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1년 단위

로 확대되면 생체리듬이 파괴된 불규칙한 노동이 강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산업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탄력적 근로제가 확대되고, 각종 휴가가 무급화되면 노동시간이 더 불규칙해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해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5일근무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 없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7일 낮 2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노사정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6~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거쳐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보영)

##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제조치” 인권위에 촉구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가 인권적 마인드가 아닌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적인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제천시장의 인사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였음을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인권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거나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제천시장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는데도 인권위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회의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 역시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음직한 장애인관련법의 한계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해 결정문에서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국가인권위가 사법부나 다른 구제기관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차별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한국,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CN.4/Res/2002/16) 이들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된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함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내에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점령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아랍국가들 중심으로 제안된 이 결의안의 투표에서 캐나다, 체코, 독일, 파테말라, 영국이 ‘반대표’를 던져 친 이스라엘 혹은 친미적인 경향을 명백히 했다. 한편 프랑스, 스페인 등은 찬성한 반면 이태리, 포르투갈은 기권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공조체제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참관국인 미국은 투표권이 없다.

일본, 우루과이 등도 기권을 표시했으나 한국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유엔전문가는 “항상 주위 강대국 눈치를 보고 기권표만 던지던 한국이 이스라엘 비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 한국도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보고를 위해 급파되기로 했던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 15일 “이스라엘의 입국불허로 인해 여전히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요청했다.

##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유엔인권위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함께 ‘테러방지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이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안보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12일 코피 아난 유

엔사무총장은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인권보장과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지의 강력한 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력 복귀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지난 ‘양심적 병역거부’ 발언 때와는 달리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민변의 발언 이후 곧 있을 한국정부의 반박권 행사에서 어떻게 반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럽연합·미국, 북한 인권상황 제기

지난주에 시작된 ‘각국의 인권상황’ 의제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스페인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럽연합은 내년 유엔인권위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정부는 “최근 유럽연합과 관계도 개선되고 있는데, 왜 북한을 지목하느냐”며 “이는 국가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북한정부는 어찌구무없는 인권침해와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부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단은 “미국의 상습화된 반복한 감정을 거부한다”고 밝히며 “악의 축” 발언 등은 북한을 괴롭히려는 억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은 압제·고문·실업·암살·노숙자문제 등 국내에서 뿐 아니라 외국 군대

주둔으로 해외에서까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HR/CN/02/29)고 비난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권”

유엔인권위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정부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크로아티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이미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오는 1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싱가포르를 “크로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집단적 국방의 의무에 반하며,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인권활동가는 “싱가포르의 여전히 캐캐묵은 ‘아시아적 가치’와 ‘안보’의 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국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군 의무복무제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주 민변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서면발언문을 제출한 데 이어, 팩스 크리스티, 케이커, 아시아 리걸리소스 센터, 파스 로마나 등 국제 민간단체들도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의 한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의한 수인은 엠네스티의 수임사항에 따르면 ‘양심수’라고 강조하며, “엠네스티는 양심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김철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8일(목)

제 20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장애인들은 평생 실업자로 살 것을 감수받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짐승처럼 살아왔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서울 시내에 울려 퍼졌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1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외면하면서도 기업선전에만 장애인을 활용하는 삼성제철 규탄대회를 갖고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무노조 정책으로 악명 높은 삼성 제철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분담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사광고에 장애인을 이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들의 상징적 표적이 됐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30대 기업 내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등 삼성제철의 계열사를 모두 합치면 부담금이 약 80억에 이른다. 서울지역사무노동조합 김경진 위원장은 “최근 삼성은 한 장애인을 전면 지원해 월체어로 유럽행단을 한 광고를 내보내며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카피를 통해 마치 자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업인 것처럼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70%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고, 그나마 취업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임금체불과 불법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분포를 살펴보면 8시간 이하가 41.7%인 반면, 9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하가 56.4%에 이른다. 평균노동시간이 13시간인데 반해, 임금은 79만2천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인 121만1천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동기획단은 이날 집회에서 △현행 300인 이상 기업체로 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 △장애인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 △작업안전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업종을 구체화할 것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노동문제상담소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

키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용촉진기금의 개선도 촉구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4월 20일은 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해졌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을 남산에 데려가 꽃구경시키고 놀이공원에 초청해 마치 살맛 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를 기만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박 교장은 “기만적 장애인행사 참여를 거부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노동권, 생존권, 학습권, 이동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는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 비리 척결 결의대회’가 열리며, 오후 7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장애인중투쟁 영상전이 열릴 예정이다.

[김보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떨꺼등이」 창간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2002/96쪽

노숙인 실태 및 복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살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나왔다. 지난 해 12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친 준비 속에서 만들어진 떨꺼등이에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권리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게 노숙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매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소인원이 10인 미만의 쉼터인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106개소에서 92개소로 14개의 쉼터를 폐쇄했다. 하지만 「떨꺼등이」는 서울시의 결정이 노숙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한다. [최은아]

<주요 목차>

노숙인의 빈곤과 주거권/ 쉼터 폐쇄 이대로 좋은가/ 노숙인 쉼터실무자들의 소진 원인 연구 등 (www.homelessaction.or.kr)

##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학대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으나,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처리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만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의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어린이·청소년 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이 2천1백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식주나 교육 등에 대한 방임이 672건(3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신체학대 476건(22.6%), 정서학대(5.4%), 유기(6.3%), 성학대(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가 중복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은 방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연구팀장인 장화정 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되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학대가 진행되어 이미 심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잠재적으로 전체 아동의 2.6%인 3천5백5만 명이 학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발견되는 건수는 0.5%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학대의 후유증도 심각하다. 송과아동학대상담센터 자문위원 안동현(한양대 소아정신과 교수) 씨는 “학대가 심각한 상처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 공격적인 행동, 사회성 결여, 신체발달의 지연 및 인지발달 지체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결석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뺨을 맞고 발로 몸을 걷어차이고 모욕적인 말 등의 학대를 당한 세진(가명·남·15세)이는 그 후 신경성 구토 증세를 보이고 설사를 계속해 4-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학대 과정에서 모서리에 허리를 다쳐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공적 체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엔 역부족이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호균 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능한 민간단체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은 센터 하나당 5명의 인건비(1인당 1천3백만원 정도)와 연간운영비 2천만원 정도”라고 재정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시·도별로 1군데밖에 없어 실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상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소장은 “학대를 당한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8명의 인원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빠듯해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론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은 과다한 동사무소 업무만으로 포화상태인 실정이다. 결국 국가가 취해

야 할 적절한 조치는 포기되고, 그것이 온전히 민간단체로 떠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사들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국가의 경비 전액 지원이 절실”하며 “시·군·구 차원으로 센터를 곳곳에 만들어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원]

##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정적인 시선을 거부하고 공동의 투쟁에 나선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10개의 요구(아래 상자 참조)를 내걸고 26일 공동토론회, 4월 하순 실업·불안정노동자의 생활지표 발표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 하나. 노동법 계약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를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 하나. 복지 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 하나. 월드컵을 발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거주의 자유 보장하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19일(금)

제 20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 고된 노역에 연골과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째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내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과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공상 처리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했던

것. 결국 김 씨는 소송을 통해 권리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상 싸움이 순탄할 리 만무했다. 처음엔 '공상 처리'를 요청하는 신청서조차 접수해주지 않았고, "피병 부리지 마라. 쓸 데 없는 짓 하지 마라"는 등 공무원들의 편견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자신의 싸움을 지지해주던 동료 공익근무요원들도 하나둘씩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원칙대로 해결돼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당당히 승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무릎은 완치되지 않았다. "노동상실도 18%의 장애입니다." 보행이나 평상시 생활의 불편은 없지만, 앞

으로도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을 경우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던 탓에 수술차 병가를 얻었던 기간에 대해 억당 간의 연장복무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김 씨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낙담하기도 했는데,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도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만 북무여건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사례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끝에 얻어낸 결실 이어서 더욱 값지다. [이창조]

## 만화사랑방

이동수



진짜 장애인의 날은 어느 것 일까요?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고서를 읽어 보라"고 밝히며, '발언시간 단축조치'에 항의하여 보고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따로 민간단체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 버마, 정치활동제약·강제노역 심각

'미얀마(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치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노역에 관해서는 ILO 방문 이후 '경미한 상황개선'이 보였으나, 산 주, 카렌 주 동부지역, 라친 주 북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민간인 강제노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달 3백~7백여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피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중 다수가 태국에서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재송환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십만 여명의 국내난민들이 강제노역을 피해 국경지대에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해 한 버마 망명정부 대표는 "군사정부를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세계화, 주거권에 심각한 영향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보고서(E/CN.4/2002/59)'에서 밀론 코타리 특별보고관은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어이없게 뛰어 올랐다"고 밝히며, "결국 민중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개발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인종적, 경제적 차별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주거권을 위협받는 집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루마니아, 멕시코의 치아파스 방문 보고와 관련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계층들의 주거권 침해사례"들을 제시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타리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 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주거지역의 파괴 행위 등을 다룬 방문보고서가 일부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도 다뤄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E/CN.4/2002/75/Add.2)'에서는 86개국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엔 한국과 관련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아비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은 "방북과 관련 강정구교수 등이 구속된 사건에 관해 긴급청원을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장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구속된 데 대해, 작년 11월 2일 '인권활동가 보호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사와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긴급

청원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한 한국의 인권단체활동가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한국의 관련 현안들도 이러한 유엔의 특별절차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간단체, 탄압에 반격 시도했으나...

이번 인권위에서는 민간단체의 참여에 대한 탄압과 일정지연으로 인한 소규모 단체들의 발언기회 상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인권상황' 의제에서 다시 한번 민간단체의 발언기회 박탈 사건이 있었다. 저개발국가에서 온 소규모 단체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이 의제가 진행되던 지난 9일, 40여 개 단체의 발언을 중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이러한 의장단의 조치에 반발해 일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단체들은 '발언거부' 등 강경한 자세로 저항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 단체들은 긴급히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의장 면담요청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다음 날 열린 '의장과외의 간담회'에서 폴란드 출신의 야쿠보르스키 의장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제네바·김철효]

##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 농성 끝내

18일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날 정리집회에는 민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 민중연대, 새사회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또 대우자판 소속 노동자 150명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까지는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아 테러방지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의사 일정 상 다음주부터 상임위 속개가 예정돼 있어, 언제 정보위가 열려 테러방지법이 심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후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20일(토)

제 20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 이주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단속·주방 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의 21일 집회 참가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19일 낮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평등노조 이주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국정원·법무부·경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집회 참가가 커녕 집회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또 출입국관리소 측은 “참석이 예상되는 주요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주주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을 목

사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자신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무부 말대로라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다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주노동자 카일(가명) 씨는 “우

리가 집회 간다고 한국 정부가 그러면 그건 억압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억압하지 않겠어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카일 씨는 “공장에서 맞으면서 한국말 배우고 일 배웠어요. 인간 대우 못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를 합법화 안 해 주고 1년 안에 내보내려고 해요? 우리 잘못된 거 없어요”라며 법무부의 ‘자진신고 기간 설정’에 대한 불만과 집회에 참가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2면에서 계속)

##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잔혹한 2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인류가 건져 낸 소중한 결실이다. 집단학살, 조직적 강간, 노예화, 고문 등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빠저리게 반성하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여태껏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2000년 3월 재판소 설립규정에 서명을 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판소 설립규정이 일부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것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내법의 공소시효제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상범죄들은 공통적으로 시효의 적용을 안 받지만, 현행 국내법은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소시효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부의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공소시효란 증거가 사라짐에 따른 재판의 어려움과 도피죄의 범인이 느꼈을 고통,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단죄의지가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제도적 ‘관용’일 따름이다. 범죄의 유형과 양태에 따라서는 시효를 불문하고 단죄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 존재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마땅한 처사다. 정부는 언제까지 공소시효제도를 고집하며 인권 후진국을 자처할 셈인가! 이 점에 있어 우리는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은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뿐 아니라, 국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들을 시효 없이 처벌함과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함으로써 미래에는 더 이상 반인도적 범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굳건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 “회사측의 불법파견·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4일 거제도의 대우조선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 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절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들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노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노조의 회사의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아침 노동자들이 탑재1부의 불법파견 관련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저녁 회사측이 인력부 사무실 벽을 부수며 들어와 노동자들의 농성은 강제 해산됐고 현재 사측과 노조는 각각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거제경찰서와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당시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에 대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회사 측의 산재요양 신청 방해와 불법파견에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회사측은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줄테니 요양 신청은 하지 마라”, “허위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불씨를 낳았던 탑재 1부의 경우, 최근 23명의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사측이 협력업체 직원

을 불법으로 파견 근무시킨 것이 확인됐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에 물량을 더 준 것일 뿐이며 작업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면담한 협력업체 직원은 “직영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노동자 모두 같은 작업장에서 직영반장의 지휘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즉, 협력업체 직원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파견법이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촉

구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부족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거제경찰서에 당부했다. (이주영)

(→1면 기사 이어짐)

법무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올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사진과 공장주소 등이 기재된 신상기록, 내년 5월 25일 이전 출국날짜가 찍힌 항공권, 고용주의 이탈방지 각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 간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히고, 이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년 후의 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 1년 내에 모두 추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의 이주노동자 집회 역시 이러한 판단 아래 준비된 것이다. (이주영)

##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등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과장, 정보3과장과 1층 민원실 로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대표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자 수사과장은 “경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고 극악한 범죄자나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에 전국급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밀어내 기자회견 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23일(화)

제 20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 ‘무쟁의 선언’도 요구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22일 국회 건너편 노상에서 전임간부 40여 명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재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종료 이후 구속 8명, 고소고발 57명, 파면 10명, 직위해제 20명, 손해배상청구액 16억원, 3월조합비 전액가압류! 하지만 철도청은 앞으로도 현장간부 80여 명을 해고하고 파업참가자 1백8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종료 당시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징계 및 고소고발 등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으나, 현실은 이러한 합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6~9일 진행된 철도청과 철도노조 사이의 노사협약에서는 “징계범위는 구속기소된 자와 본조합 전임간부 및 지방본부위원장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잠정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11일 돌연 중징계 대상에 ‘폭력행위, 기물손괴, 명예훼손 등 직장안정을 저해한 자’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철도청 노정과 정병진 씨는 “징계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철도청의 징계방침을 대변했다. 현재 철도청은 철도노조에 무쟁의 선언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이종선 교육국장은 “정도껏 해야지”라고 혀를 내두르며, “더 이상 대화만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단식에 돌입한 울분을 표했다. 이 교육국장은 이어 “철도청은 합의를 해도 깨버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며, 이를 가장 큰 예로 점으로 꼽았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계속해서 노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 전국 규모의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방침과 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재파업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향후 철도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범용)

##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어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 모인 15~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애초 이 시각, 이들은 1천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종묘의 집회장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19일 정부가 21일 집회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집회장 주변에서 모두 잡아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이들은 집회에 갈 수 없었다. <본지 4월 20일자 참조>

“어떤 친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리 24시간을 계속 일했어요. 또 집회 때 쓸려고 간신히 핸드마이크를 빌려놓은 친구도 있어요. 피켓을 만들려고 종이도 오리고, 뿔 얘기하고 노래할까 모여서 이야기도 했어요.” 노동자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합법화를 촉구하는 일이 이들에겐 그만큼 절실했다. 하지만 정부의 집회참가자 단속 방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대중 집회는 급히 내국인들의 정부 규탄 집회로 바뀌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당해낼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모리(가명) 씨는 “우리에게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필리핀 노동자 야차(가명) 씨는 “건강을 해치고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정부는 우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조차 못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노동자 사마드(가명)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한국을 더 맑은 사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해 도리어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주영)

<알림>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 때 : 4월 24일 오후 7시
- 장소 : 종로 4가 종로성당 강당
- 문의 : 02-741-5363 (유해정)

##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노조는 현재까지 15명 구속, 348명 해고, 고소당할 조합원수 894명, 4037명에 대하여 230억 4500만원의 가압류, 해임자 가족들에게 대한 사택 퇴거 요구,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노예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또 ‘발전노조파업 종식 및 향후대책’이란 제목의 산업자원부 문건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가 소속된 발전산업노조를 기업법 노조로 분리시키는 등 산업법노조에 대한 해체를 유도하고 ‘강성노조에서 화합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식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지배계급 부당노동행위다.

파업 중에는 어떠한가? 단순히 여행중일 뿐인 파업조합원들이 묵는 여관에 경찰이 들어닥쳐 연행해 갔다. 일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파업)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복귀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온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버스를 타고 발전소로 돌아가면 바로 석방하고 안 그러면 유치장 신세를 저야 했다.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 때문도,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한 요구여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진 말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파업에 들어간 것 때문이었다.

이 같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아예 파업권이 박탈돼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 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단병호 위원장 변호인단은 그 변론요지에서서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띠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 주간인권호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1. 이, 시체는 썩는데 학살은 없었다고?

유엔 인권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4.15)/ 유엔특사,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년 현장증언...“난민촌 곳곳이 파괴됐고 시체 부패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4.18)/ 미 국무장관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년에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년에서 학살은 없었다” 입장 고수(4.19)

###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예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4.19)/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측이 노조원 대상으로 무차별 신청한 가압류 실태 폭로...“노조 무력화 의도로 밖에...”(4.15)/ 철도청, 징계최소화를 위한 노사실무협의 최종 결렬(4.18) → 파업참가자 6명 파면 2차 징계(4.19)/ 철도노조, 징계철회 요구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방지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정에 신중(4.16)/ 미 상원, 테러지원국 국민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국경보안강화법 등 통과(4.18)

### 5. 주5일근무 도입, 좀 제대로 하지!

민주노총,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기자회견(4.16)/ 민주노총,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내용 공개 등 요구하며 노사정위 항의농성(4.17)

### 6. 기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0개 단체,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주노총·여연 등, 시그네틱스 노동자 알몸수색 사태해결 촉구...경찰청, 자해위험 평가로 알몸수색 정당화(4.19)

### ○ 중요판결 및 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간다학교 양희창 교장에 선고유예...“대안학교 운영, 비록 법을 어겼지만 비교육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4.1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 거대한 회사 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발전파업 두 달이 되어 가는 23일, 명동성당의 오후는 고즈넉했다. 이 달 초까지만 해도 전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24시간 출입을 통제당하며 느낄 수 있었던 살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며... 하지만, 파업대오 대부분이 현장에 복귀한 현 시점에서, 이호동 위원장 등 발전노조 간부들은 명동성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서 김주현 당진화려 지부장을 만났다.

"파업이 중단된 거죠.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김 지부장이 꺼낸 말머리였다. 파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파업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고뇌가 엿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3백48명 해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여명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 강요 등 발전회사 측은 일단 투쟁의 기세가 꺾인 발전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었다.

김 지부장에 의하면, 고소당한 8백94명은 파업 직전 근무한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자, 파업 당시 불법연행된 후 복귀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자 혹은 노조 상임집행 간부다. 쉽게 얘기해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자들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회사 쪽 으로부터 1대1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파업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졌는지, 앞으로 파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조합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

"회사측이 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

습니다. 인사권, 징계권, 감사권 등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을 최대한 통제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무용론, 노조무용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파업 당시 노조 위주의 분위기가) 현장을 회사 위주로 이끌어 가려 하고 있지요." 현 상황에 대한 김 지부장의 진단이었다.

하지만 발전노조는 꺼져가는 투쟁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고 있었다. 지난 18일부터 5일간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했다.

23~24일에는 용인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해고자 수련회를 열고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 건설을 꾀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오는 세계 노동절을 기점으로 조직력 복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기간산업법대위와 함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김 지부장의 핸드폰은 간간히 울렸다. 비록 몸은 명동성당에 묶여 있어도 현장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5월 말까지 제2파업을 위한 조직역량을 만들 것이라는 발전노조의 계획은 명동성당의 교요함 속에서 품틀대고 있었다. [범용]

### 클릭 인권정보자료 글리백을 통해 본 특허권

글리백의 원재료 소매가격은 845원. 반면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백 1갑셀 당 가격은 25,005원. 무려 29배가 웃도는 차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허권이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묶이는 것은 비단 한국의 글리백 사례만이 아니다. 에이즈 치료약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약이 그림의 떡인 이유도 특허권 때문이다. 케냐의 경우 HIV 감염자가 2백3십만 명으로 추정되며 하루에 7백여 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에이즈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들은 겨우 0.043-0.086%에 불과하다.

지난 해 11월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의 TRIPs 협정과 공공의 건강에 대한 선언은 "공중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실시권의 허가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 글리백 사건 일지 (2000. 12-2002. 3. 7)
2. 글리백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3. 특허권과 인권-글리백 사건을 중심으로 (남희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1 1/12)
4. OXFAM BRIEFING PAPER
  - A. Eight Broken Promise : Why the WTO isn't working for the world's poor
  - B. Patent Injustice : How world trade threaten the health of the people
5. 글리백 관련 기사모음 (최은아)

##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 이번 회기 막바지, 결의안에 대한 투표 이어져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ion)'을 제출해 원천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중국,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등 강성 인권후진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 국가들과 합세해 한국과 일본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중남미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선택의정서 초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문의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고문방지협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이집트, 중국, 쿠바 등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선택의정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이 인권후진국들과 대열을 나란히 한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고 꼬집었다. 이번엔 통과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올해 이어지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검토 후 통과되면, 정식 국제조약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 유엔 사회권포럼 올해부터 개최 '반세계화 투쟁', 장내투쟁 교두보기대

지난 5년동안 인권소위원회가 설립을 주장해 온 유엔사회권포럼이 결국 인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 22일 인권위원회는 올해부터 인권소위원회 회기 이전에 2일간 '사회권포럼'을 열기로 결정했다.

사회권포럼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97년 '인권과 소득분배'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에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적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와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폭넓은 민중의 참여'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계속 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오다가, 결국 올해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사회권포럼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 몇 년간 영국의 주도로 계속 부결되거나 연기되어왔다. 올해도 영국이 '인권소위 회기기간 동안 개최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쿠바 등이 강하게 반발하여 회기 이전 2일 동안 개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캐나다, 일본, 영국은 반대하였고, 한국과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유엔사회권포럼은 사실 포르투갈령의 세계사회포럼 이전에 제안돼 왔으나 이제 서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시애틀, 제노아 등에서 터져나온 반세계화 운동이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었고, 유엔사회권포럼을 통해 '장내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제네바:김철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포르도 아무런 반대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권단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98년과 2000년에는 싱가포르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이 표결 이후에 "전체적 합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대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췌하는 내용의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 한국은 98년에는 서명했으나, 2000년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싱가포르가 주도해 다시 발췌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알려져,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제네바:김철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 5년 간 173명 사망, 하루 14.2 시간 노동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같은달 서울 광진우체국 임모 씨는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동원하여 지방세 등기우편물 2천여 통을 배달하다 길거리에 쓰러져 뇌사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하루 한 집배원 노동자가 배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은 1백여 통이 고작이다.

## 올해 1월 인천 계양우체국 박모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 8시경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사망했다. 이 또한 과로사였다.

## 지난해 서광주우체국 이모 씨는 간암발기 판정을 받은 채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 결국 사망했다. 이씨가 사망한 날에도 서광주우체국에서는 집배원 노동자 1백30여 명을 대상으로 등기우편물 사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 했다.

24일 오후 2시30분 용산 철도역당홀에서는 민중의료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주관 아래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이 전국 13개 우체국의 집배원 2백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집배원 노동자들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4.2시간이었으며 13시간 이상으

로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2.4%였다. 특히 16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율도 17.6%에 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12시간, 1주일 최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박석기 의장에 의하면, 집배원 노동자들은 아침 6~8시에 출근해 당일 도착한 빠른 우편물을 분류한 후 배달을 시작한다. 배달구역에 나가 우편물 배달을 완료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면 대충 저녁 7시. 하지만 집배원 노동자들의 하루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때부터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 특히 각종 요금고지서와 홍보책자의 증가로 우편물이 폭주한 최근 들어서는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기가 일쑤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5년간 1백73명이 사망했고, 1천2백44명은 사고를 당했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편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소포 물량은 전년대비 60%가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집배

원 증원은 6.1%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보통신부는 별정직, 상시위탁, 대우, 재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각종 이름을 붙여가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1만4천여 명의 집배원 노동자 중 47.9%인 6천7백여명이 비정규직이다. 민중의료연합은 "일의 양과 시간은 똑같은데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집배원의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특별상여금도 없으며, 호봉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 근무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집배원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질병과 불만족에 시달려야 한다고 보고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백90명 중 90%가 넘는 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51.9%가 근육통에, 43.7%가 관절염에, 31.2%가 요통에, 29.8%가 디스크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주영두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채용 △장시간 근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집배원 1일 적정 업무량 설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박석기 의장은 이에 동감하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보통신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용)

##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씨가 누운 상태에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국가인권위는 "진주교도소측이 이 씨를 경상대 병원응급실로 입원 조치하고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건의를 했음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주영)

##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옛 원진레이온 사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직업병 파문이 예상된다.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대규모로 직업병 환자가 발견됐으나,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회사측의 압력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대우조선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조짐이다. <본지 4월 20일자 참조>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김정근)이 7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380명을 무작위 추출해 검진을 실시해 보니, 무려 248명이 직업병의 일종인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드러났다(본지 3월 7일자 참조). 이 가운데 88명이 요양을 신청해, 현재 76명이 직업병을 인정받고 요양중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직업병의 대명사로 불려온 원진레이온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88년 이후 2000년 사이 확인된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환자 수는 8백명이 넘었다.

### 회사측, 산재규모 축소에 안간힘

그런데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현지 조사를 벌였던 민변 등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회사측이 직업병 판정 조합원에게 '산업재해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치료해 줄 테니 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함께 하지 마라"며 요양신청을 가로막거나, 이미 요양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회사측으로서 집단요양에 따른 생산타격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집단요양 최소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직업병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이 실시될 경우엔 작업공정이나 작업시간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측이 항의농성에 들어간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고 곧바로 경찰이 지

도부를 전격 구속한 조치 등에 대해 노조측은 사태 확산을 막아보려는 회사측의 의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점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었다"며 "회사측에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노조, "노동건강권에는 양보없다"

대우조선 노조는 그간 노동건강권과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취해온 사업장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민중연대의 한 활동가는 "산재 발생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상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대우조선 노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회사 내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배경엔 구조조정과 그에 따라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지난해 대우조선에서는 산재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 아동의 단체수용시설 입소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60여명 이상의 아동이 수용돼 있어 아동들이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이기 쉬워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들레센터의 최효정 사회복지사는 그룹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 씨는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은 가정"이라며 "부모의 주요한 문제가 해결될 동안 아이를 임시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체위기의 가정에 회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룹홈의 한 형태인 민들레센터의 경우 장기 실직이나 빛, 보충 등으로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의 아동을 6개월에서 1년 간 양육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위탁가정제도는 현재 300여 가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은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위탁가정에 대해 월 6만5천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기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32세대의 그룹홈만이 지원대상이다. 대부분의 그룹홈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며 미인가 복지시설로 파악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민들레센터의 최순옥 사회복지사는 "그룹홈이나 위탁가정도 기존시설과 마찬가지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 관리책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26일(금)  
제 20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현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 준법서약은 명령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고,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석방규칙은 수형자에게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는 "수형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어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을 합리화했다.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

합하다는 것이 현재의 논리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효종 재판관 등은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

이날 현재의 결정을 접한 인권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준법서약서에 대해 현재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캠페인팀장은 "기본적으로 준법서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현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통제해야겠다는 억압적인 반인권 제도를 엄호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온몸을 내던졌다"며 합헌결정을 규탄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현재의 결정이 남북관계를 근거로 차별을 합리화한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준법서약제도가 왜 (국보법 위반자가 아닌) 집시법 위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범용)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 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들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와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교정시설 의료사고는 인제

이승호 교수(전국대 법대)의 사회 아래 첫 발제에 나선 건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상임활동가. 유 상임활동가는 수용자의 의료실태라는 주제 하에 "관련된 법령의 허술함은 물론 의료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모든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대부분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교정당국의 발상이 만들어낸 인제"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를 발제한 김종명 의사는 "영국의 경우 수용자 1인의 1년 의료비가 1천만원 정도고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의료 예산이 우리의 1백 배에 달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수용자 의료에 관한 연례보고서가 작성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런 자료는 일반인에게도 모두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형법, 의사 상주규정도 없어  
이승호 변호사는 수용자 의료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는 '일부러 의료에 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역시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형벌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수용자 건강보호와 질병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제시한 반면 행형법

엔 의사가 교정시설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는 법무부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담당자 출장'이란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와 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 의료, 단순치료 아니다

발제가 끝난 뒤 마이크는 참석자들에게 돌려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석률 씨는 "의료는 단순한 치료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에 걸맞는 운동과 식사 등이 수용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무르익을 때쯤 불참한 줄 알고 있었던 법무부 관계자 2인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장내가

## 국제엠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24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엠네스티는 성명에서 엠네스티가 국가정보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엠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한다고 평했다. 또한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없이 테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난민신청의 권리를 부인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의 모호성을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 엠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27일(토)

제 20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 디지털 도서관,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동시에 특정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그 도서의 수로 제한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읽으려면 도서관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 사실상 그에 따르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했다. (제28조 2항)

이에 대해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강사인 정경희 씨는 "디지털 도서관의 장점은 먼 거리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서관을 디지털화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원래 도서관이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이어 받아 이용자가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를 보호했던 데에 비해,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나 투자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

다. (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보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

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서 계속)

##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재의 재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현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을 제출하게 하여 준법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정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떼뺏아갈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교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현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현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하기에 국민의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형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면 그만이지 다른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자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개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현재의 논리는 퇴행과 후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사고의 자유에 그치고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침묵할 자유'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현재의 판결은 그나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침묵할 자유'마저도 허용치 않는 뒷걸음질이다. 또한 양심을 지키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감히 설교하고 있다. 국가의 설교가 있기 전에 양심의 자유자들은 이미 그런 실천을 해왔다. 국가의 몫은 가당찮은 설교가 아니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 "사쪽, 노조원·비노조원 차별했다"

대규모 직업병과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대우조선노조(위원장 김정근, 아래 노조)는 26일 오전 10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 쪽이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여기에는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인력부의 건장한 직원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 (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더욱 현저한 것"이라고 지난 4일 폭력사태를 평했다. 당시 노조는 인력부

직원들의 폭행에 항의해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때 회사는 인력부 직원들을 앞장세워 농성 중인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바 있다. (본지 25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는) 인력부 직원 및 ... 관리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 간부들을 고소·고발"했다며, 이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현격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정근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만이 회사 쪽의 고소·고발에 의해 구속된 상태.

노조는 또 "회사는 지금까지 비노조원의 산재와 관련 ... 통제와 감시를 한 적이 없"지만, "유독 노조원들이 신청한 산재요양에 대해서는 각종 회유·협박을 통해 요양신청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근로격계질환 소견자로 판명된 2백48명 중 88명만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 검진을 위해 방문한 의료진의 현장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검진불참을 종용했고, 이후에는 산재포기각서 강요, 급여중단 협박, 일일 동향보고 작성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번 진정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안국장은 "경철이 노조간부들만 구속하고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성을 지적했다. 박 산안국장은 "노동부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진정은 노동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회사 쪽의 노조탄압을 차별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주목된다. (범용)

(=>1면 <저작권법 관련 기사> 이어짐)

저작권법 개정안은 예초 올 29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도서관장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해 일단 국회 논의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신장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저작물의 자유 이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주영)

##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분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군인 미결수용자들은 주2회의 제한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매일 1회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용자와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분안 심사 전 효력을 정지해 진행되는 기본권의 침해해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분안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이 군 형사범에 대해 일반인과 달리 기소 전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이 추가로 가능케 하는 것과 관련, 조 대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조 대령이 기소돼 당사자에게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에 대한 분안 심리에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 제6회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아트큐브와 아트선재센터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제6회 인권영화제는 후원회원들의 도움 속에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02-741-2407/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4월 30일(화)

제 20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의문사 이윤성씨 프락치공작 증거발견

### 운동권 친구 최씨, "사망 한달 전에 만났다"

82년 11월 강제징집당한 후 6개월만에 의문사한 이윤성 씨가 군 복무 중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4일 이윤성 19주기 추모제에서 '이씨가 사망 한달 전쯤 사회에 나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학교 앞 술집에서 운동권 친구인 최모 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현 등, 아래 계승연대)는 최씨와 함께 29일 오후 1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규명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의문사위에 제보했다.

간담회에서 최씨는 "83년 3월말, 4월 초 정도에 당시 운동권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서 1시간 정도 윤성이를 만났"으며, "너희 씨들은 잘 되냐, 다들 뭐하냐"는 등 알맹이도 없이 일상적인 안부만을 묻다가 '누구 또 만나야 한다면 바쁘게 자리를 뺐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당시 윤성이와 같은 과이기

는 했지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씨클도 달랐기 때문에 윤성이가 왜 나를 만나자고 했는지 의아했었다"고 밝혔다. 또 "사복을 입고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며, "당연히 집에서 사복을 갈아입고 나온 줄 알았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매형 박정관 씨는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우리는 처남이 (82년 11월) 집에도 못들어 온 상태에서 강제징집당한 후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죽어서 돌아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반응했다. 당시 이씨의 집은 서울 성내동 잠미아파트였으며, 이는 이씨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성균관대)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군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최진방에 배치된 지 6개월만에 휴가로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정상적인 휴가라면 당연히 집에 연락했을텐데 그렇지 않았으며, "이는 정상적인 휴가가 아니라 당시 보안사의 강요에 의한

프락치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규명위 이재범 조사관은 "이번 제보에 의해 녹화사업이 단순한 특별정훈교육이었다는 군의 주장은 무너졌다"며,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프락치 공작의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평했다. 이제까지 군 당국은 녹화사업에 대해 '특별정훈교육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프락치 공작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비슷한 시기 발생했던 또 다른 의문사 김두환 씨 사건이 이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경존안자료를 의하면, 당시 경찰은 김씨가 학습했던 '아방과 타방'이라는 문건의 작성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문건의 작성자가 바로 최씨의 씨를 선배였던 것.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이씨가 (자신과 씨클도 다른) 최씨를 만난 것은 '아방과 타방'이라는 문건 작성자를 찾기 위한 프락치 활동의 일환이었을지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써 향후 규명위의 조사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군 당국이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범용)

<오늘 오후 2시30분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서울 종로4가 종교공원 옆)
- ◇ 사회 유시민 (시사평론가,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장)
- ◇ 발표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4.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운영에 대한 견해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 ○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 아프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내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린 지 한 달만에 그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진폐증'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광맥을 쫓아다니던 도중 당시 도 모르게 허파 깊숙이 쌓였던 먼지 찌꺼기들이 미처 손주의 재롱도 볼 새 없이 이승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때가 때였던지라 직업병 판정이나 보상은 없었다. 그보다도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수명을 재촉했다는 사실은 당신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절절한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 온다. 산업현장 곳곳에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의 한 공단에서는 주물공장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진폐증을 비롯한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광부들만의 질병인 줄 알았던 진폐증이 일반 제조업 노동자들까지도 집어삼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거제도 대우조선소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요양에 들어갔다. 병명은 '근골격계 질환'. 쉽게 말해 오래 육체노동의 결과, 허리가 추시고 어깨가 결리는 등의 통증이 고질화된 것을 말한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이라면 누구나 걸리기 쉽고, 책상 앞에 앉아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들도 비켜가기 쉽지 않은 질환인데,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해마다 25명씩의 집배원 노동자들이 과로에 따른 안전사고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하루 평균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라 한다. 도대체 또 어떤 업종과 직장에서 '죽음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될 지 걱정스럽다.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최근의 경고는 결코 흘러들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한 산업안전시스템 등 총체적 노동조건 결과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대책도 이미 나와 있다. 전반적인 역학조사, 그에 따른 시스템 정비, 그리고 부족한 인력의 채용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휴식 보장 등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하지만 나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련의 직업병 폭로에 대한 끔찍한 시선들이다.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자기 몸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오래 근무하다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질환"인데 왜 호들갑이냐는 식의 반응을 볼 때면 소름까지 돋는다. 일하다 보면 아픈 것이 당연하고 재수 없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식의 감수성이 지배하는 한, 산업현장의 암운을 견어내기란 무망할 것이다. "아프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창조 :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

## 주간인권호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년학살

이, 예년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하레츠> 보도(4.24) / 예년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25)

### 2. 의문사위, 진실을 '캐내십쇼'

의문사위, 83년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 확보(4.25) / 또, 73년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88년 검찰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정 직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췄음이 드러났다고 밝혀(4.29) / 계승연대, 83년 의문사한 이윤성씨에 대한 프락치공작 관련 새로운 증거 제보... 당시 이씨가 사망 한달 전 성균관대 앞에서 운동권 친구와 만난 사실 최근에 밝혀져(4.29)

### 3. 우편배달부, '비상벨'을 누르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등이 주관한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5년간 173명의 집배원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등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 폭로(4.24)

### 4. 주목! 유엔인권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외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 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 주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4.25) /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4.26)